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국민의힘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약속을 지키는 도깨비, **도약이!**
정책 약속으로 대한민국의 찬란한 **도약**을 보여줄게!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1 부동산 시장과 주거의 자유

내 집 마련 | 주거안정

2 근로자 · 소상공인 · 중소기업이 행복한 일터

근로자·일터 | 소상공인·중소기업

3 국민 지갑 플러스

국민 지갑 채움 | 국민 세금 절약

4 일상의 보장, 일생을 책임

출산 | 육아·돌봄 | 청년 | 어르신 | 연금개혁 | 반려동물

5 미래국가 설계

AI·미래산업 | 에너지 | 과학·기술 | 교육 | 기후·환경 | 정치·행정·지방자치 | 규제개혁

6 함께하는 복지

약자와 함께 | 국민 건강

7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농어촌 | 문화·관광 | 지역발전 | 교통 혁신

8 안전한 울타리

국민 안전안심 | 아동·청소년 보호 | 우리국민 보호

9 흔들림 없는 외교 · 안보

외교 | 스마트국방 | 장병복지 | 국가헌신 예우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9대 비전

32개 정책과제

세대·대상별 맞춤공약 16

01 부동산 시장과 주거의 자유

내 집 마련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 확대를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31
천원주택 전국 확대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32
집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일을 막겠습니다. 33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34
수도권-지방 주택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35
갑작스러운 부동산 정책변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겠습니다. 36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쿼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37
육아친화 공공주택 1만 호를 짓겠습니다. 38

주거안정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41
청년월세지원 30만 원 상향 및 대상 확대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42
전세사기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겠습니다. 43
집값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44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로 주거 마련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45
우리국민이 역차별 받지 않는 부동산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46

02 근로자·소상공인·중소기업이 행복한 일터

근로자·일터

청년 일자리 감소와 노동시장 양극화 없는 고용연장법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51
일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52
플랫폼 공제회로 노동법 사각지대의 종사자를 보호하겠습니다. 53
불합리한 노란봉투법을 재개정하겠습니다. 54
육아 지원 패키지로 엄마·아빠가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55
ESG 경영에서 EFG 경영으로 가족친화적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56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57
산재예방요율제 전면 확대를 통해 예방 중심 산업안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8
민간 안전보건 전문인력 및 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59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억울하지 않게 공정한 거래환경을 만들겠습니다. 61
사람과 활력이 넘치는 K-장터 만들겠습니다. 62
나홀로 일하는 장애인 사업주를 돕겠습니다. 63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확대해 소상공인 구인난을 해결하겠습니다. 64
소상공인 정책연구소를 설립하겠습니다. 65
다시 도전하는 청년 창업을 응원하겠습니다. 66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67
중소기업 승계 안전망 구축으로 일자리와 경제를 지키겠습니다. 68
중소 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고 발주자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69
고용허가제 확대로 외국인 근로자 숙련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70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R&D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기술과 일자리를 키우겠습니다. 71
지역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AI 도입·전환 풀패키지 바우처를 신설하겠습니다. 72
여성 건강 산업(펨테크)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73

03 국민 지갑 플러스

국민 지갑 채움

밸류업으로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77
디지털자산 법제화로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78

국민 세금 절약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81
받은 만큼 내는 공정한 상속세로 바꾸겠습니다. 82
국세 카드납부 대행수수료를 면제하겠습니다. 83
중소기업 청년 평생 절세 패키지로 월급을 든든하게 챙기겠습니다. 84

04 일상의 보장, 일생을 책임

출산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낳고 건강하게 기를 수 있도록 국가가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89
난임 휴가·치료 풀패키지로 난임부부의 힘이 되겠습니다. 90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상담인력 확대로 더 많은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91
미혼 여성에 대한 난자동결을 국가가 지원하고 가임력 검사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92

육아·돌봄

유보통합으로 격차없는 돌봄과 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95
시간제돌봄, 24시간 긴급돌봄, 조부모돌봄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96
맞벌이 부부 퇴근길, 틈새돌봄으로 걱정없이 챙기겠습니다. 97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을 현실화하겠습니다. 98
숙련 아이돌봄사를 확충하겠습니다. 99
노후 아파트 단지 실외놀이터를 가족의 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100

청년

지방대학교 계약학과 등 지역인재 정착패키지로 청년이 머무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103
지역 청년 글로벌 커리어 브릿지를 구축하겠습니다. 104
깜깜이 스드메 OUT! 예비부부의 억울함을 없애드리겠습니다. 105
기숙사 확충과 지역 상생형 주거지원으로 대학생 1인 1실 시대를 열겠습니다. 106
고립·은둔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7

어르신

누구나 찾고 싶은 열린실버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109
급이 다른 백신으로 어르신 건강 챙기고 의료비 부담을 덜겠습니다. 110
치아 걱정 없는 100세 시대,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4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111
치매 어르신 안심 돌봄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112
어르신이 일을 하셔도 연금 손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13
효도 밥상으로 주 7일 경로당 무료 점심을 제공하겠습니다. 114
안전하고 활기찬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115
맞춤형 시니어돌봄주택을 도입하겠습니다. 116
어르신들이 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7

연금개혁

모두를 위한 연금제도를 완성하겠습니다. 119
정부수익금을 국민연금으로 전환하겠습니다. 120

반려동물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123
반려동물 놀이터와 반려동물 위탁소를 확대하고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124

05 미래국가 설계

AI·미래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한국판 IRA)를 도입하여 산업을 지키고,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129
초격차를 넘어 반도체 초강대국을 만들겠습니다. 130
글로벌 AI 산업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131
K-AI 브레인 리턴 프로젝트로 AI 인재를 국내로 복귀시키겠습니다. 132
창작자와 함께 성장하는 AI 산업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133
지방대학에 AI 연구 인프라 및 전력 공급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34
국가 핵심 자원 관리 체계를 강화해 자원전쟁 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135
경기남부에 반도체 신공항·철도 건설하여 미래산업 물류네트워크를 만들겠습니다. 136

에너지

원자력과 에너지믹스로 폭발적인 전력수요에 대비하고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139
신규 원전 추가 건설 및 K-원전 수출 시대를 열겠습니다. 140
SMR 파운드리(위탁생산) 산업을 육성하고, SMR 종주국 지위도 회복하겠습니다. 141
원자력 인력 10만 명 육성과 동해안 원전벨트 조성으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겠습니다. 142

과학·기술

과학기술예산 7% 확보를 통해 과학기술 G3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145
과학기술 인재 연구보상 혁신 패키지를 도입하겠습니다. 146
과학기술인 연구 몰입 지원 풀 패키지를 도입하여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7
성실한 실패가 자산이 되는 연구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148

교육

공정한 공교육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151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52
원어민과 함께 하는 우리 아이 첫 영어 놀이터, 공교육이 함께 합니다. 153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와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54
아이 키우기 좋은 우리 동네, 교육특구가 지역의 자부심을 높이겠습니다. 155
학생 맞춤 교육으로 가능성을 깨우고, 통합 지원으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56
거래된 문항이 실력을 이길 수 없도록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뽑겠습니다. 157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58

기후·환경

지역별 맞춤형 기후테크를 육성하겠습니다. 161
기후보험으로 야외근로자의 생계를 지키겠습니다. 162
탄소중립·ESG 대응으로 지역기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163

정치·행정·지방자치

국회의사당과 청와대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 시키겠습니다. 165
국회와 지방의회간 협력 강화하고 지방의회 입법 제안창구 신설하겠습니다. 166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으로 교육감 선거제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167
어렵고 복잡한 정책 지원금, 클릭 한번으로 받게 하겠습니다. 168
국책사업 예산 현미경을 구축하겠습니다. 169
지자체 여권 발급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70
지역행정 최일선 이·통장들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수당을 인상하겠습니다. 171
지방정부의 자주재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2

규제개혁

규제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하겠습니다. 175
규제자유특구 확대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176

06 함께하는 복지

약자와 함께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국민채움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81
장애인이 삶의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182
장애인 근로·사업 소득 전액 공제로 장애인의 자립을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183
대한민국 어디서나 끊김없는 여정, 무장애 관광 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184
장애인 교통 프리패스 통합 바우처를 도입하겠습니다. 185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186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장애인 지원주택·주거생활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187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188

가족돌봄수당 및 간병 가족 휴식 지원 확대를 통해 가족 간병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189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190
다문화 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91

국민 건강

전국 방방곡곡 건강 1번지,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193
응급실 뺑뺑이 해소로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194
제2의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사태가 없도록 예방접종 모든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195
외로움·고립으로부터 국민 마음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196
의료 공백 없는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197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시니어 간호사를 현장으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198
국민 건강의 최전선 보건소에 숙련된 간호조무사를 더하겠습니다. 199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200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201
가까운 진료, 똑똑한 관리, 안전한 내 정보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로 건강 강국 대한민국을 열어가겠습니다. 202
혈압·당뇨에 대한 개인맞춤형 스마트 책임관리를 실현하겠습니다. 203

07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농어촌

경자유전(耕者有田)에서 경영유전(經營有田)으로, 농민을 위한 농지로 변화시키겠습니다. 207
농민은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농산물 물류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208
농어촌 일손 부족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209
우리동네 효도버스를 농어촌에 배치하겠습니다. 210
농어업을 대한민국 수출엔진으로 만들겠습니다. 211
농민을 힘들게 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 212

문화·관광

민간 주도 K-컬처 규제 샌드박스 특구 조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215
시·군·구 단위 국민체육센터와 읍·면·동 단위 우리동네 체육관을 확충하겠습니다. 216
국가유산을 지역 거점 문화자원화하여 지역문화관광 시대를 열겠습니다. 217
15분 문화 생활권 조성으로 비수도권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218
지역으로 확장하는 K-콘텐츠 시대를 열겠습니다. 219
초광역권 메가시티에 국립미술관·국립국악원과 K-POP 전용공연장을 건립하겠습니다. 220
K-콘텐츠 기반 한류산업을 K-푸드·웰니스·관광 등 한류연관산업으로 확장하겠습니다. 221
낚시를 문화레저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222

지역발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225
기업을 부르고 청년을 남기는 지역경제 부활 파격 세제 패키지를 추진하겠습니다. 226
한국형 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을 확대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227
공공기관 및 기업 지방 이전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완성하겠습니다. 228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지방관광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 229
권역별 KIST 분원 추진으로 R&D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230
세계 TOP3 글로벌 항만허브를 구축하겠습니다. 231
군사 규제 완화로 해안의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232
군 유휴지 및 미활용 군용지를 민·군 상생을 위한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233
민통선 조정과 합리적 재설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34
방치된 빈집을 분산형 호텔로 바꿔, 지방의 관광·일자리를 함께 살리겠습니다. 235

교통 혁신

어르신 대상 전국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37
나도 역세권! 광역 급행 교통망으로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완성하겠습니다. 238
K-패스 환급 확대로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239
지역이 살아나는 교통을 만들겠습니다. 240
청년에게 대중교통 바우처를 지급하겠습니다. 241
UD택시 확대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242

08 안전한 울타리

국민 안전안심

조직사기범죄로 빼앗긴 내 재산, 가장 먼저 돌려드립니다. 247
나이 뒤에 숨은 범죄, 더 이상 예외는 없습니다. 248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49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250
1조 규모 사이버재해보험 제도화로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해 신속히 보상하겠습니다. 251
선결제 피해를 막겠습니다. 252
성범죄자 신상관리 사각지대 해소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253
성별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보호체계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54
112 AI 드론 우선 출동으로 치안 골든타임을 만들겠습니다. 255
혼자라도 든든하게, 24시간 지켜주는 AI 안심 돌봄 센터 구축하겠습니다. 256

아동·청소년 보호

아이들을 위한 중독 없는 SNS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59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60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범죄를 엄벌하겠습니다. 261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부합하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62
본인부담금 없는 디딤씨앗통장으로 모든 아이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만들겠습니다. 263
내 아이의 건강한 오늘과 내일, 국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264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265

우리국민 보호

해외발 여론조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267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268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정착 올인원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69

09 흔들림 없는 외교·안보

외교

중국 서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습니다. 273
트럼프 2기 대응 종합전략으로 한미동맹 플러스를 제시하겠습니다. 274
지역 맞춤형 대중국 전략으로 안보는 단단히 경제는 다변화 시키겠습니다. 275
미래지향 한일협력 2.0지방정부 중심 생활밀착 외교로 나아가겠습니다. 276
로컬의 글로벌화! 지역 전략산업 글로벌 세일즈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277
750만 재외동포 네트워크 활용하여 지역투자 시대를 열겠습니다. 278

스마트국방

K-방산 스타트업 혁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81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구축해 첨단과학기술군을 실현하겠습니다. 282
AI 국방혁신 시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83
국방 첨단 기술 R&D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84

장병복지

군 복무를 미래 준비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287
군 가산점제를 남녀불문 도입하겠습니다. 288
장병의 처우개선으로 강한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289
예비군 훈련참가자 처우개선과 군 구조 개편으로 상비병력 부족 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290
장병들이 안심하고 군 임무를 수행하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291

국가헌신 예우

최상의 보훈으로 호국영웅의 헌신에 끝까지 보답하겠습니다. 293
소방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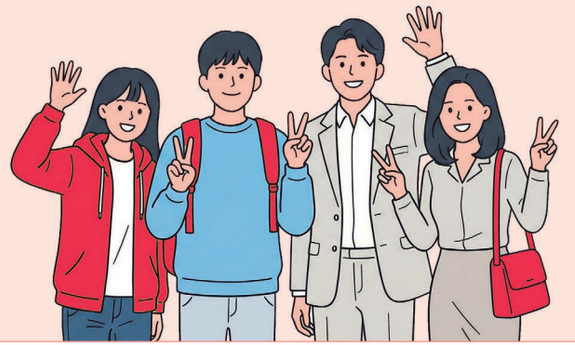
세대·대상별
맞춤공약

오늘의 발걸음, 내일의 도약이 되도록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발걸음은 맞추고 삶의 질은 높이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두는, 새로운 정책 변화가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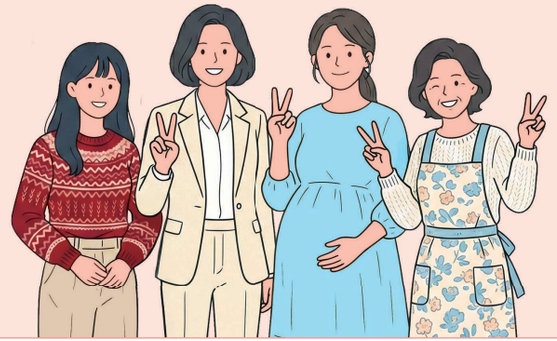


청년



- 천원주택 전국 확대를 통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
- 신혼부부 초저금리 주거자금 대출 지원 및 출산 자녀 수에 이자·원금 감면 혜택
-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쿼터제 도입(신규 임대 물량 30% 의무 배정)
- 전세사기로부터 청년 보호 강화
- 청년월세지원 30만 원 상향 및 대상 확대
- K-패스 환급률 상향 및 대중교통 바우처 지급으로 교통비 부담 경감
-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를 위한 고용연장법 추진
- 기업의 지방대학교 계약학과 신설 촉진 및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 상향
- 천원의 아침밥 확대로 생활비 부담 경감
- 재도전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과 심리 케어 병행으로 청년 창업 재도전 지원
-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청년 글로벌 커리어 브릿지 구축
- 중소기업 재직 청년 소득세 감면 기한 폐지 및 한도 상향
- 깜깜이 스드메 문제 해결을 통한 결혼 비용 부담 완화
- 은둔·고립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먼저 경험했던 당사자 멘토 활용 지원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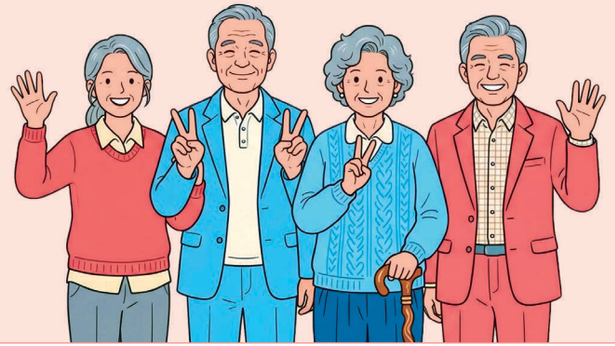
- 임신·육아 안심 원스톱 정보 연동 시스템 구축
- 난임휴가 10일 이상 확대 및 난임치료 건강보험 본임부담 제로 추진
-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폐지
- 미혼여성 생식세포동결 시술비 국가 지원 및 가임력 검사 횟수 확대
- 365일 24시간 위기임산부 상담 대응체계 구축
- 산부인과 의료공백 해소 및 순회 전문의 파견제 도입
- 워킹맘·워킹대디도 걱정없는 근무환경 조성
-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는 EFG(환경·가족·투명한 지배구조) 경영 확산
- 여성 건강 산업(펨테크) 기업 발굴 및 집중 육성
-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 폭력 피해자 보호 법체계 정비

아동·청소년



- 본인부담금 없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
- 시간제돌봄·24시간 긴급돌봄·조부모돌봄 확대 지원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제도 개선으로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
- 전국 거점형 야간 보육시설 및 권역별 24시간 일시돌봄서비스 시설 운영
- 다문화가족 자녀 돌봄·언어발달 지원·교육 지원으로 함께하는 사회 실현
- 아동·청소년 대상 SNS 중독형 알고리즘 제한 및 유해 콘텐츠 이용 제한
-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부합하는 국내입양 절차 개편
-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자립 지원 강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괴범죄 처벌 강화

어르신



- 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
- 열린실버센터 설치
- 신규 폐렴구균 백신·고면역성 인플루엔자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도입 및 대상포진 백신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지원
-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확대
-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 전국 확대 및 치매 어르신 안심 돌봄 체계 완성
-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및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 상향
- 맞춤형 시니어돌봄주택 도입 및 어르신 놀이터 전국 확대
- 주 7일 경로당 무료 점심 제공
- 어르신을 위한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 및 금융사기 예방 강화

소상공인



- 가맹본사의 가맹점주 대상 불법 대부 행위 처벌 강화
-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의 대금 정산 기한 단축 추진
-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대금 정산 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 부과
- K-장터 브랜드화를 통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육성
-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로 소상공인 구인난 해결
-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부담 경감

과학기술인



- 과학기술예산 7% 확보를 통해 과학기술 G3 강국으로 도약
- 완전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규제 프리존 지정
-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물가상승 및 재정사업 규모 변화에 맞게 상향 조정
-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 기술 유출 방지 강화
- 핵심 AI 인재 대상 파격적 세제 혜택 및 보상 체계 정상화로 해외 인재 국내 복귀 지원
- 글로벌 톱티어 AI 비자 및 가족 정주 여건 패키지 지원
-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체계 개편
- 국가전략기술 분야 2030 신진 연구자 소득세 감면
- 비수도권 산단 연구직 종사자에게 취득세·재산세 감면 및 거주 기간 비례 소득세 추가 공제
- 기업의 대학 R&D 출연 펀드에 대해 수혜연구자 비과세 혜택 부여
- 테크 스타트업 스톡옵션 과세 이연으로 초기 자금 부담 없는 창업 지원
- 연구개발 직군 연봉 표준 인상
- 출산·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는 연구 공백 자동 보정 평가제도 도입
-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박사 학위 필수조건 및 사후 의무 종사 규제 전면 폐지
- 연구자의 중소기업·스타트업 겸직 및 파견 제도 확대
- 성실실패 불이익 없는 도전적 연구 분위기 조성
- 연구자 중심 상향식 연구 기획 체계 구축

농어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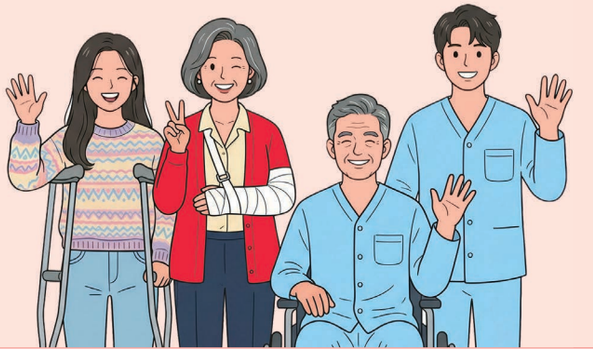
- 농지이용 규제 완화를 통한 농업의 첨단화·규모화 육성
- 농어업 기업화·규모화로 대한민국 수출엔진 육성
- 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농산물 도매거래 온라인 중심 전환 확대로 농민의 소득 증대
- 왕진버스·찾아가는 편의점 등 농어촌 생활서비스 지원 확대
-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원스톱 농정 시스템 지원 구축으로 농민의 수고로움 경감
- 농어촌 우버 도입으로 교통 공백 해소

학생·학부모·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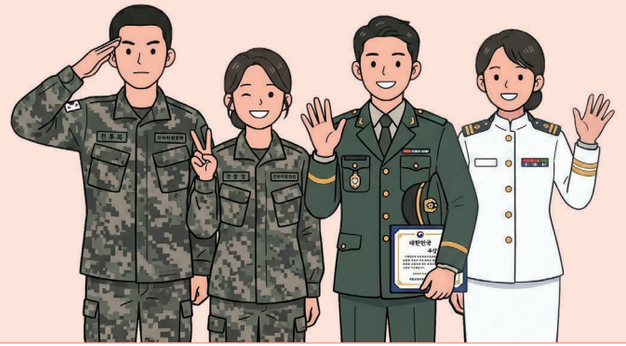
- 공정한 공교육 사다리 구현
- 유아 대상 영어 원어민 교실 운영
- 교육특구 선도지역 확대로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기반 구축
- 초등학생까지 예체능 학원비 소득공제 확대
- 사교육 카르텔 근절
-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으로 균일한 교육 기회 제공
- 직업계 고등학교 경쟁력 강화
- 초등학생 신입생 안경구매지원금 및 초고도비만 초·중·고등학생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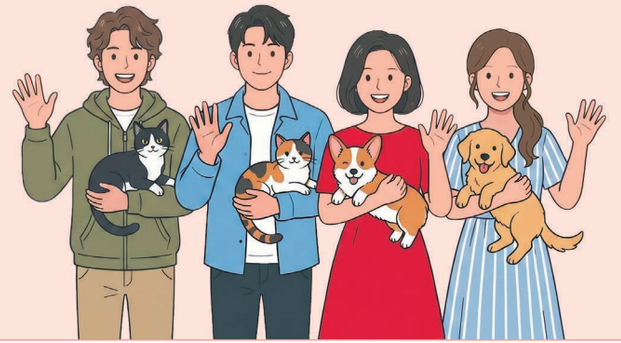
- 장애인지 정책 운영체계 구축 및 장애인 당사자 참여 확대
- 중증장애인 지원주택 및 주거생활서비스 확대로 지역사회 안착 지원
- 장애인 근로·사업 소득 전액 공제 및 근로활동 의료급여 유예로 자립 지원
- 장애인 창업 육성 및 사업화 자금 지원 강화
- 장애인 교통 프리패스 통합 바우처 지원
- 끊김 없이 이동을 보장하는 무장애 관광 특구 조성
-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및 보조기기 원스톱 거점센터 설치
-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교육·고용·상담 지원체계 구축
- UD택시 확대로 이동권 보장

군인



- 군 가산점제 도입
- 군 복무 기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 여성희망복무제(여성 전문군인제) 도입으로 군 인력 진출 기회 부여
- 군 경력이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및 군 복무 기간 중 전문 분야 교육 강화
- 초급간부 처우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확대하고 소령~중령급 중견간부 처우 개선
- 「군인복지기본법」을 군무원까지 포함하는 「국군복지기본법」으로 제정
- 병영생활관 및 급식 품질 등 장병 복무 환경 개선
- 법무관 증원으로 병사와 초급장교에 대한 법률지원 확대
- 군 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체계적·효율적인 안전사고 관리체계 구축
- 국군 의무사 예하 국군의무후송항공대 확대 등 군 의료체계 혁신

반려동물 입양 가구



- 동물병원 제공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 표준화
- 펫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보장 범위와 지원 조건 개선 등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제도적 기반 마련
- 펫로스 증후군 극복 위한 심리치료 지원으로 반려동물과의 아름다운 작별 지원
- 유기동물 입양 지원으로 자연사·안락사 최소화
- 비문(鼻紋) 안면인식 등 생체 정보 활용 반려동물 등록 방식 개선

01 | 부동산 시장과 주거의 자유

내 집 마련 | 주거안정



내 집 마련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 확대를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천원주택 전국 확대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집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일을 막겠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 수도권-지방 주택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 갑작스러운 부동산 정책변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겠습니다.
-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쿼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육아친화 공공주택 1만 호를 짓겠습니다.

실천 01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 확대를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서울 및 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 및 확대

-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 추진 확대

실천 02

천원주택 전국 확대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기부채납 물량 일부를 천원주택으로 확보하여 신혼부부 및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공급

파격적인 임대료와 상황에 맞는 임대 유형 선택

- 하루 천원(월 3만 원)의 파격적 고정 임대료, 최장 6년(최초 2년, 연장 2회) 거주
- 매입임대형, 전세임대형 중 상황별 거주유형 선택

실천 03

집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일을 막겠습니다.

신혼부부 초저금리 주거자금 대출 지원

- 혼인 5년 이내 또는 6개월 내 혼인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비 및 임차보증금을 연 1% 이내의 초저금리로 대출 지원

출산 자녀 수에 따른 파격적인 이자 및 원금 감면 혜택

- 대출 상환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이자 전액 면제
- 2명 출산 시 원금의 1/3, 3명 출산 시 2/3, 4명 이상 출산 시 원금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지원

실천 04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 완화**
- **법적상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0%로 완화**
-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75% → 70% 완화(재건축과 동일수준)**
-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비율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50~75%에서 30~50%로 완화**
- **주변지역에 공원·녹지가 충분할 경우 현금 기부채납 허용**
- **이주비 및 민간매입임대사업자 대출 LTV 70% 적용**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양도 제한 시점 현행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후로 완화**
- **수도권 도시정비개발금융공사 특별 공공기관 설립**
  - 민간 재건축 전문가 채용 및 기존 도시개발공사에서의 도시정비 기능 이양
  - 인허가 패스트트랙 운영, 이해관계자 조정·중재
  - 시공사와 협상을 통한 공사비·사업비 검증 및 표준계약 관리
  - 금융 패키지(보증·브릿지·리볼빙) 설계 및 제공
  - 공공임대·이주대책 연계(주거약자 보호)

실천 05

수도권-지방 주택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DSR 규제 완화, 미분양 주택수 제외, 취득세 75% 감면, LTV 90% 확대)

- **일률적으로 적용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비수도권 지역에 단계적 완화**
- **지방 미분양 구입 시 주택수 제외**
  - 지방 미분양의 상당수가 준공 전 60~85㎡ 중형주택 물량으로 실질적 미분양 해소 위해 준공 전 물량도 포함
-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 부여**
  - 지방 미분양 주택 및 노후 주택 매입 시 최대 75%까지 취득세 감면
  - 일정 기간 보유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과세 이연 혜택 부여
- **지방 미분양 아파트 LH 직접매입 확대 및 미분양 해소 CR리츠 활성화 위한 세제 혜택 강화**
  - 기업구조조정(CR) 리츠의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시 취득세 50% 면제 등
- **지방 부동산 활성화 및 금융 지원 확대**
  - 지방 부동산 평균 가격을 고려하여 실거주 목적 매입 시 LTV(담보인정비율)를 최대 90%까지 파격적으로 확대
  - 장기저리의 지방주거안정 특례론을 도입하여 실수요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
- **1주택 특례 지역 확대**
  -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주택 추가 취득 시에도 1세대 1주택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 개정
  - 생활 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마련

부동산 시장과 주거의 자유

실천 06

갑작스러운 부동산 정책변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겠습니다.

▶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불합리한 피해 방지

- 「주택법」 개정을 통해 주택금융·대출 관련 제도가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제도 변경 이전에 청약 당첨이 확정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의 주택금융·대출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

실천 07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쿼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신규 임대 물량 30%)

▶ 공공임대 쿼터제 도입

- 정부가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전체 물량의 30%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의무적으로 배정
- 청년·신혼부부 배정비율은 전체 공급물량 기준으로 설정하되, 지역별 공급 여건에 따라 탄력 적용

실천 08

육아친화 공공주택 1만 호를 짓겠습니다.

▶ 육아친화 복합형 공공임대주택 1만 호 공급

- 1층 육아 시설과 상층 주거 결합형 구조 도입
- 도심 내 생활권 중심 입지에 집중 공급

▶ 주거면적 및 구조 개선

- 최소 전용 59㎡ 이상 의무화, 74~84㎡ 중심 확대
- 유모차·아동 생활을 고려한 평면 설계 적용

▶ 단지 내 육아 인프라 통합 구축

- 어린이집, 키움센터, 실내놀이터, 어린이도서관, 공동육아공간 설치
- 부모 커뮤니티 공간 및 공동 돌봄 기능 강화

내삶이올라갈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주거안정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청년월세지원 30만 원 상향 및 대상 확대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전세사기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겠습니다.
- 집값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로 주거 마련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우리국민이 역차별 받지 않는 부동산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실천 01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공제율 상향 및 환급형 구조 도입

구분	현행	공약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22%(환급형 적용)
5,500~6,500만 원	15%	22%(환급형 적용)
6,500~8,000만 원	15%	20%
8,000~9,000만 원	제외	20%

※ 6,500만 원 이하 구간은 납부세액이 부족하더라도 일부 환급 가능 구조 설계

▶ 공제 한도 상향

- 연공제 한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 적용대상 총급여 9,000만 원까지 확대

▶ 무주택 요건 강화

- 분양권·입주권 보유자 제외
- 1주택자 적용 불가 유지

▶ 관리비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신설

실천 02

청년월세지원 30만 원 상향 및 대상 확대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지원 금액 상향 (월 20만 원 → 월 30만 원)

- 지원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 총 지원액을 최대 720만 원(24개월 기준)까지 확대

▶ 소득 기준 완화

- 청년가구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100% 이하로 변경
-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총 재산가액 기준을 1.22억 원을 1.5억 원으로 상향

실천 03

전세사기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겠습니다.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 가능 매물 인증서 사전 발급제 도입

-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발급 제도 도입
- 발급 횟수 제한, 수수료 부과 등 과도한 신청 방지를 위한 운영 장치 마련

▶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전국 확대

- 서울시 1인가구 대상, 무료 상담·계약 전문가 동행 서비스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전국 확대

▶ 공인중개사에게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설명의무 부과

- 표준 계약서의 핵심 보호 조항 및 특약 설명 의무화
-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하여 최신 법령 반영된 표준 계약서 사용 촉진
- QR코드 기반 안내 시스템 도입으로 임차인의 현장 정보 접근성 강화

실천 04

집값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재산세와의 통합 추진

- 종합부동산세를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여 이중과세 구조 개선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조정

- 주택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기본공제금액 상향
  (일반 : 9억 원 → 10억 원, 1세대 1주택자 : 12억 원 → 13억 원)
- 실수요자 중심으로 과세 기준을 현실화하여 중산층 세 부담 완화

▶ 세 부담 상한 조정

- 세 부담 상한을 150% → 120%로 인하

▶ 실수요자 보호 및 주거 안정성 제고

- 1세대 1주택자 및 고령층의 보유세 부담 완화
- 세 부담의 임차인 전가 가능성을 줄여 주거 안정성 강화

실천 05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로 주거 마련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인지세법」 개정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 면제

- 임차인이 전세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보험기관과 체결하는 대출을 인지세법상 비과세 대상 문서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전세자금대출의 인지세를 면제

※ 무주택 서민들, 전세자금대출 때마다 인지세 반복 납부

실천 06

우리국민이 역차별 받지 않는 부동산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외국인 양도소득세율 상향
- 외국인 주택 임대소득 중과
- 외국인의 주택 취득시 취득세율 강화, 보유 시 재산세율 강화
- 외국인의 종합부동산세 세금 부담 강화
- 외국인 주택 보유 제한 및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심사 위원회 설치

내삶이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02 근로자·소상공인·중소기업이 행복한 일터



근로자·일터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 청년 일자리 감소와 노동시장 양극화 없는 고용연장법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 일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 플랫폼 공제회로 노동법 사각지대의 종사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불합리한 노란봉투법을 재개정하겠습니다.
- 육아 지원 패키지로 엄마·아빠가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 ESG 경영에서 EFG 경영으로 가족친화적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 산재예방요율제 전면 확대를 통해 예방 중심 산업안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민간 안전보건 전문인력 및 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실천 01

청년 일자리 감소와 노동시장 양극화 없는 고용연장법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한 노동자를 재고용하는 등 노동자에 대한 고용연장 의무를 부여

실천 02

일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 **공정한 기회부여와 투명한 평가제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임금체계 개편**

- **직무정보(워크넷)와 임금정보(임금직무혁신센터)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직무별 시장임금정보 확대 제공**

- **기존의 개별 기업 단위 한계를 넘어 업종별 특색에 맞춰 임금체계 연계 인사노무 관리 전반 컨설팅 실시**

실천 03

플랫폼 공제회로 노동법 사각지대의 종사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플랫폼 공제회 설립으로 공적 지원을 강화**
  -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운행, 건강권 보호 등을 공제회 차원에서 관리
  - 정부는 사회적 비용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는 금융과 행정서비스 이용 및 재취업 과정에서 경력 증명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사업수행 시 서면계약서 작성 및 직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실천 04

불합리한 노란봉투법을 재개정하겠습니다.

▶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범위 등을 명확화하여 공정한 노사문화 형성 지원**

실천 05

육아 지원 패키지로 엄마·아빠가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 **육아 골든타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확대**

- 현행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 **엄마의 출산휴가 종료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개시되는 체계 마련**

- 육아휴직이 필요하지 않을 시 선택 가능

실천 06

ESG 경영에서 EFG 경영으로 가족친화적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는 경영문화를 일구기 위해 EFG(환경·가족·투명한 지배구조) 경영을 확산

- 경직적인 근로와 고용관행을 유연하고 가족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
- 저출산 시대 한국에서 사회적 책임의 핵심 가치가 가족이라는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EFG 경영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

▶ 가족친화인증제 고도화 및 EFG 경영 인증제 도입 및 세제혜택

- 정량 중심 평가에서 실제 활용도 중심으로 개편
- 중소기업을 위한 간소화된 예비인증 제도 도입
- 법인세 감면, 조달가점, 고용보조금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 강화

실천 07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추진과 병행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 추진

▶ 유급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을 우선 추진 및 영세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방안 병행 추진

실천 08

산재예방요율제 전면 확대를 통해 예방 중심 산업안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산재예방요율제 감면 폭 확대

- 위험성평가가 철저히 이행되고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 사업장에 대해 현행 평균 감면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 우수 사업장은 차등 감면율 확대
- 반복 안전(무재해) 사업장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도입

▶ 모든 업종 확대 적용

- 현재 일부 업종 중심의 적용 구조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
- 제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건설·물류·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까지 포함

▶ 위험성평가 실질화 강화

- 서류 중심 평가가 아닌 현장 작동성 중심 평가체계 확립
-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발굴,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보험료율 산정에 직접 반영

▶ 예방 중심 안전 패러다임 전환

- 처벌 중심에서 인센티브 중심 구조로 정책 방향 전환
- 기업의 자발적 안전 투자 유도 및 근로자 안전 인식 개선과 교육 참여 연계
- 소규모 사업장 행정부담 완화, 안전망 구축이 가능하도록 안전 패키지 지원

실천 09

민간 안전보건 전문인력 및 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 민간 안전보건 전문인력 및 관련 산업 적극 육성과 기업들의 자율적 산재 예방 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 실시

- 안전보건 관련학과 신설 등 전문인력 양성 시책 마련 및 교육훈련비용 지원
- 민간기관의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 산업안전보건 기반조성과 기술혁신 사업 지원
- 산업안전보건 투자액 조세 감면
- 노사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산재예방사업 지원
-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 및 안전보건 관리비용 지원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 소상공인이 억울하지 않게 공정한 거래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사람과 활력이 넘치는 K-장터 만들겠습니다
- 나홀로 일하는 장애인 사업주를 돕겠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확대해 소상공인 구인난을 해결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연구소를 설립하겠습니다.
- 다시 도전하는 청년 창업을 응원하겠습니다.
-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중소기업 승계 안전망 구축으로 일자리와 경제를 지키겠습니다.
- 중소 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고 발주자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 고용허가제 확대로 외국인 근로자 숙련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R&D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기술과 일자리를 키우겠습니다.
- 지역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AI 도입·전환 풀패키지 바우처를 신설하겠습니다.
- 여성 건강 산업(펨테크)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실천 01

소상공인이 억울하지 않게 공정한 거래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가맹본사가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의 대금 정산 기한 단축 추진
-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대금 정산 기한 준수, 대금 별도 관리 의무 부과
- 「통합분쟁조정법」제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추진

실천 02

사람과 활력이 넘치는 K-장터 만들겠습니다.

지역별 K-장터 브랜드화

- 지역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개성을 살린 테마형 K-장터 조성하여 먹거리, 문화가 융합된 방문 거점 육성
- 지역 특화 문화 거리 조성, 특산물 활용 대표상품 개발 및 홍보 지원, 축제 개발

밤과 계절에 특화된 경제 활성화

- 주야 및 계절 변화에 맞춰 더 활발해지도록 기본 시설과 관리 시스템 구축
- 특화경제 구역을 지정, 맞춤형 셔틀버스를 운행, 치안과 행정 서비스 집중 지원

온누리상품권 편의성 확대

- 가맹점 확대 및 QR결제 시스템 혁신으로 사용자 편의성 대폭 개선

실천 03

나홀로 일하는 장애인 사업주를 돕겠습니다.

장애인 창업 육성 및 사업화 자금 지원 강화

- 예비 창업자부터 재창업 희망자까지 장애 유형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화 자금 지원

장애 유형별 경영 컨설팅 및 교육 강화

- 전문 컨설팅을 통해 실무 역량 강화하고 장애 특성을 반영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접근성 제고

업무 지원인 서비스 도입 및 인프라 구축

-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사업주를 위해 행정 보조, 의사소통, 전화 응대 등을 수행할 보조 인력 파견 지원

실천 04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확대해 소상공인 구인난을 해결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의 구인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 고질적 인력난 완화 및 체계적 인력공급을 위해 소상공인 인력지원
- 소상공인 주요 서비스업종에 대한 실태파악을 거쳐 서비스업 소상공인 외국인 근로자(E-9) 허용업종(숙박업, 제과점업, 주유소업 등) 및 직무범위 (주방 보조원만 가능했으나 홀서빙 등까지 가능) 확대 추진

▶ 현장경험이 쌓인 외국인 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는 기간 연장

▶ 국내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D-2)을 대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E-9)으로 전환을 허용하고, 숙련기능 훈련 실시

실천 05

소상공인 정책연구소를 설립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 빅데이터를 근거로 중앙 및 지방 소상공인 간 소통 및 정책 집행 가교역할
- 현황 파악 등 조사, 연구 담당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플랫폼 기능 실행
- 소상공인 정책의 실현성, 효과 및 수단의 적정성을 분석해 문제점 개선

실천 06

다시 도전하는 청년 창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재도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심리케어 병행

- 재도전 위한 역량 강화 교육과 함께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심리 케어를 병행하여 심리적 안정 도모
- 실패 원인 분석 및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를 통해 재창업 성공 가능성 제고

재도전 성공 선배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 재기에 성공한 선배 창업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실질적인 성공 사례와 노하우 공유
- 재도전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선배 창업가들이 함께 참여하며 밀착 조언하는 멘토링 시스템 운영

신용 회복 및 재기 자금 지원

- 창업 실패로 신용도가 하락한 청년에게 법률 자문 및 채무 조정 서비스 제공
- 재창업에 필요한 초기 자금 및 정책 융자 지원을 확대하여 금융 장벽 해소

청년창업사관학교 재도전 특화 트랙 신설

- 재창업자 특화 프로그램 운영하여 교육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

실천 07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도로점용료 감면

각 지자체의 세외수입 비중을 고려하여 도로점용료 차등 감면 추진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과 도로점용료 감면 범위를 주택에서 건축물 등으로 변경하는 「도로법」 개정
- 중소기업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를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

실천 08

중소기업 승계 안전망 구축으로 일자리와 경제를 지키겠습니다.

▶ 「중소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추진

- 경영자 고령화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 지원
- 승계 개념을 기존 가업승계에서 기업승계로 확장해 제3자 및 M&A형 승계까지 폭넓게 포함
- 세제 및 금융 지원

▶ 승계 지원 인프라 조성

-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정부 산하 기관 지정
- 기업승계 M&A에 대한 일원화된 정보 플랫폼 구축
- 전문적 승계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문·중개업 등록제 도입

실천 09

중소 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고 발주자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도급자격을 업종기준으로 규정 개선

- 주계약자는 종합업종, 부계약자는 전문업종으로 공동으로 도급하도록 규정

실천 10

고용허가제 확대로 외국인 근로자 숙련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동일 사업장 일정 기간 근무,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 직무 숙련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된 외국인 숙련 인력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 출국 없이 최장 10년+α로 확대
- **인력난이 심한 서비스업 및 농·축산업 분야 등에 인력을 확보하고 향후 적용 범위를 확대**

실천 11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R&D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기술과 일자리를 키우겠습니다.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 기술이 단절되지 않고 시장 성과로 이어지도록 기술 사업화 지원**
- **공공시장 진입 통로를 마련해 중소기업 혁신 활동 촉진**
- **공공수요 기반 기술실증 및 초기구매 활성화**
- **공공수요 혁신 거버넌스 구축**
- **고용 연계형 R&D 평가 및 인센티브 강화**

실천 12

지역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AI 도입·전환 풀패키지 바우처를 신설하겠습니다.

▶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AI 도입· 전환 풀패키지 바우처 신설

- AI 모델 구매, 클라우드 사용료, 사내 데이터 학습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지원
- 업종 맞춤형 특화 AI 보급

▶ 5대 권역별 AI 컴퓨팅 파워 허브 및 친환경 전력망 구축

- AI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권역별 분산 에너지 특구와 연계하여 i-SM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등 인프라 구축

▶ 권역별 특화산업 연계 AI 실증 규제 자유특구 지정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들이 신기술을 자유롭게 테스트하고 서비스화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AI 기술 적용을 가로막는 규제(데이터 활용, 보안 등)를 탄력적으로 유예하는 네거티브 규제 특구 지정
- 특구 내에서 창출된 우수 AI 서비스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도입

▶ 거점 국립대 및 주요 대학과 연계하여 AI 사관학교 신설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AI 활용 교육 비용 전액 국가 지원 등

실천 13

여성 건강 산업(펨테크)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 유망 펨테크 기업 발굴 및 집중 육성

▶ 맞춤형 사업화 자금 지원

- 액셀러레이터 통해 선정된 기업의 기술 수준에 따라 기술선도형 및 기초응용형으로 특화하여 지원

▶ 글로벌 시장 진출 및 브랜드 강화

- 글로벌 대형 IR(투자유치) 행사 참가 지원해 해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의 발판 마련

03 | 국민 지갑 플러스

국민 지갑 채움 | 국민 세금 절약



국민 지갑 채움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 밸류업으로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디지털자산 법제화로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실천 01

밸류업으로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월급처럼 받는 수시배당 제도 도입**

▶ **장기 국내주식형 펀드에 대한 배당 분리·저율과세, 소득공제 혜택 제공**

▶ **자녀 세대의 장기적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주니어 ISA 제도 도입**

▶ **상장법인의 물적분할 또는 인수합병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장치 마련**

▶ **경영권 변경시 소액 주주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 **일반주주 등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주총회 제도 개선**

-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3주 전에 하고,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포함
- 합리적인 주주 제안이 가능하도록 미리 배당정책 등을 공시
- 주주명부 폐쇄 시 그 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해 실제 주주와 의결권 행사자 간의 불일치 최소화
-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경우 세부적인 사항을 각각 구분해 한도 및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결의

▶ **불공정거래, 회계부정 등에 대한 엄벌**

실천 02

디지털자산 법제화로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과 영업 규제 마련
- 디지털자산사업자 업무 범위 세분화
- 디지털자산 거래지원 규정 마련, 자본시장에 준하는 공시제도 도입 등

▶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

- 혁신성과 안정성을 반영한 발행 요건, 준비자산의 기준과 운용 규정, 투명한 회계 및 공시 의무, 사용자의 법적 권리 등

▶ 강제적인 방식이 아닌 IPO등을 통한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의 독과점 해소 방안 마련 및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화 지원

▶ 디지털자산 소득세 폐지

내삶이올라갈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국민 세금 절약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받은 만큼 내는 공정한 상속세로 바꾸겠습니다.
- 국세 카드납부 대행수수료를 면제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청년 평생 절세 패키지로 월급을 든든하게 챙기겠습니다.

실천 01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물가연동제 도입**

-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자동 조정

▶ **초등학생까지 예체능 학원비 소득공제 확대**

실천 02

받은 만큼 내는 공정한 상속세로 바꾸겠습니다.

▶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 기준으로 과세체계 개편
- 상속인 수 및 가족구성에 따른 세부담 차이를 고려한 제도 정비

▶ 배우자 상속 전면공제 도입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전액 공제 추진
- 혼인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성격을 반영한 과세 기준 마련
- 과세 범위와 기준을 통합적으로 정비

▶ 납세자별 공제체계 개편

- 주요 공제제도를 납세자 단위로 재설계

▶ 상속·증여 간 과세체계 정비

- 상속과 증여 간 과세 기준을 일관되게 정비
- 과세 범위와 기준을 통합적으로 정비

실천 03

국세 카드납부 대행수수료를 면제하겠습니다.

▶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

-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으로 국세 납부 시 부과되는 수수료 전면 면제

▶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 부담 구조 개편

- 카드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는 현행 구조를 국가 또는 카드사 부담 방식으로 전환

실천 04

중소기업 청년 평생 절세 패키지로 월급을 든든하게 챙기겠습니다.

▶ 감면 일몰조항 전면 폐지로 기한없는 세제 지원

- 현행 취업 후 5년까지 소득세 감면(최대 90%) → 전면 폐지

▶ 감면 한도 상향으로 실질적 연봉 인상

- 최대 연 200만 원 한도 → 연 400만 원 이상 한도 상향

▶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타 제도와 연계

- 공제혜택으로 늘어난 소득분이 청년도약계좌 등 자산형성을 위한 제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장기재직 청년에게 우대금리와 청약 가점 등 인센티브 결합

내삶이올라갈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04 | 일상의 보장, 일생을 책임

출산 | 육아·돌봄 | 청년 | 어르신 | 연금개혁 | 반려동물



출산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낳고 건강하게 기를 수 있도록 국가가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 난임 휴가·치료 풀패키지로 난임부부의 힘이 되겠습니다.
-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상담인력 확대로 더 많은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 미혼 여성에 대한 난자동결을 국가가 지원하고 가임력 검사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실천 01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낳고 건강하게 기를 수 있도록 국가가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 임신·육아 안심 원스톱 정보 연동 시스템 구축

- 소방청-보건소–의료기관 간 산모 기초 정보 실시간 공유
- 모자보건소, 모자보건형 보건지소, 모자보건센터 전국 확대
-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출산·여성건강 코디네이터로 채용하여 임신·출산 정보제공, 병원연계, 응급 대응 등 촘촘하게 지원

▶ 산부인과 의료공백 해소 및 순회 전문의 파견제 도입

- 산부인과 공백 지역에 찾아가는 이동 산부인과 상시 운영
- 전문의가 직접 취약 지역을 찾아가는 순회 전문의 파견제 시행

▶ 임신·출산 안전 이동 지원 강화 및 산모이동도우미 인증제 도입

- 산전·산후 진료 이동비 연 6~12회 지원
- 응급 상황 시 지정 이송택시·간호인력 동행 서비스 제공
- 신생아 카시트 설치 및 탑승 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 인증제 도입
- 병원 입·퇴원 일정에 맞춘 밀착 케어 지원을 위한 산모이동도우미 양성

▶ 서비스 체감도 제고를 위한 동네 산부인과 챗봇·콜센터 운영

- 이동클리닉 일정·전문의 파견일·예약 정보 통합 안내
- 임신부 행동지침 및 응급 대응 상담 제공

실천 02

난임 휴가·치료 풀패키지로 난임부부의 힘이 되겠습니다.

- **난임 휴가를 10일 이상으로 확대하고, 필요시 반차 단위로 사용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개선**
- **난임치료 건강보험 본인부담 제로(0%)**
-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폐지**
- **난임 시술비 지원액 2배 상향**

실천 03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상담인력 확대로 더 많은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 **365일 24시간 위기임산부 상담 대응체계 구축**
  - 전국 16개 상담기관 전임인력을 기관별 최소 5명 이상 확보
- **충분한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출산 및 양육 지원**
  - 보호출산 신청 이후에도 지속 상담으로 양육 복귀 지원 강화
- **위기 상황 임산부에게 즉각 연결되는 국가 보호망 구축**
  - 상담·의료·주거·양육 연계 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

실천 04

미혼 여성에 대한 난자동결을 국가가 지원하고 가임력 검사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 미혼여성 생식세포동결 시술비 지원 신설

- 미혼 여성(20세~35세 이하) 생식세포동결을 위한 난자채취 시술비 80% 지원
- 1인당 300만 원 한도, 생애 1회 지원

▶ 의학적 사유 생식세포 동결보존 국가 지원율 대폭 상향

- 항암 치료 등으로 인한 청년 환자의 영구적 난임 위기에 대비하여 국가 지원 비율을 최대로 상향
- 지원 상한액을 400만 원으로 증액

▶ 임신 전 사전건강 관리 필수 가임력 검사 횟수 상향

- 생애주기별 1회 지원을 2회로 확대
- [1주기] 29세 이하(2회), [2주기] 30세~34세(2회), [3주기] 35세~49세(2회) 연령 맞춤형 밀착 지원

내삶이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육아·돌봄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 유보통합으로 격차없는 돌봄과 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 시간제돌봄, 24시간 긴급돌봄, 조부모돌봄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 맞벌이 부부 퇴근길, 틈새돌봄으로 걱정없이 챙기겠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을 현실화하겠습니다.
- 숙련 아이돌봄사를 확충하겠습니다.
- 노후 아파트 단지 실외놀이터를 가족의 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실천 01

유보통합으로 격차없는 돌봄과 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질 제고**

-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충
- 유치원·어린이집 간 예산 지원 격차 완화 우선 추진

▶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맞춤 돌봄 및 교육 강화**

▶ **감염병 상황에서 교사의 병가 보장을 위한 건강권 확보**

실천 02

시간제돌봄, 24시간 긴급돌봄, 조부모돌봄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 시간제 보육 대상 연령 유아까지 확대

- 시간제 보육 대상을 5세 유아까지 확대
-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22시까지 연장
- 당일 긴급돌봄 신청 마감 시간을 14시에서 17시로 3시간 연장
- 야간 연장반 전담 등 추가 보육 인력 확보 추진

▶ 24시간 긴급돌봄 지정 어린이집 확대 운영

- 심야 및 새벽 시간대 이용 가능한 24시간 긴급돌봄 지정 어린이집 확대
- 사전 신청 중심 제도를 개선해 필요시 당일 신청·당일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

▶ 조부모 돌봄 지원 대상 및 자격 유연화

- 지역별로 상이했던 조부모 돌봄 지원 대상을 24개월 미만 영아까지 확대
- 자녀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자격을 유연하게 설정하여 실질적 돌봄 공백 해소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 아동 1명 30만 원, 아동 2명 50만 원, 아동 3명 70만 원 지급

실천 03

맞벌이 부부 퇴근길 틈새돌봄으로 걱정없이 챙기겠습니다.

▶ 저소득 맞벌이 가구 대상 정부지원시간 연 120시간 추가 확대

▶ 서울형 긴급·틈새보육 3종 서비스의 전국 표준 도입

- 시·도단위로 평일 16시~22시까지 운영하는 거점형 야간보육시설 운영
- 권역별 365일 24시간 일시돌봄서비스 시설 운영
- 주말어린이집(9시~18시) 전담 시설 지정 운영

실천 0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을 현실화하겠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법적 근거 마련

- 보호아동의 돌봄·보호에 필요한 최소 인력 배치 원칙 명시
-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돌봄·보호 인력체계 유지

▶ 필수인력 지원 기준 개선

- 30명 이상→20명 이상, 20~30명 미만→10~20명 미만 조정
- 현행 30명 미만 시설에서 제외되는 사무국장, 간호사, 영양사, 임상심리상담원, 조리원 등 지원 확대

▶ 특수욕구 아동 대응 전문인력 필수 배치

- 상담지도원, 임상심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배치 기준 마련

▶ 보호아동 돌봄·상담·치료 지원 강화

▶ 종사자 업무 부담 완화 및 근무환경 개선

실천 05

숙련 아이돌봄사를 확충하겠습니다.

▶ 아이돌봄사 심리치유프로그램 법제화 및 광역지원센터 역할 확대

▶ 장기 근속 아이돌봄사 처우 개선

- 아이돌봄사 대상 장기돌봄 활동수당 지급 근거 신설을 통해 장기 근속 및 숙련도 증진을 유도하고, 인력 유출 방지

실천 06

노후 아파트 단지 실외놀이터를 가족의 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 노후 아파트 단지 실외놀이터 전면 리모델링 지원

- 준공 후 15~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단지 내 노후 실외놀이터 개선
- 노후 놀이시설 교체, 충격 흡수 바닥재 설치, 그늘막·휴게시설 확충
- CCTV·안전시설 보강 및 창의형 복합 놀이시설 도입

▶ 국가·지자체 공동 예산 지원체계 구축

- 관리비만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놀이터 개선 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
- 단지 규모, 노후도, 안전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 세대 통합형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어린이 놀이공간을 주민 공동 이용 공간으로 확대
- 그늘 벤치, 보호자 대기 공간, 유모차 쉼터 설치
- 바둑·장기 테이블, 지압 보도 등 어르신 휴식 시설 조성

내삶이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청년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 지방대학교 계약학과 등 지역인재 정착패키지로 청년이 머무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 지역 청년 글로벌 커리어 브릿지를 구축하겠습니다.
- 깜깜이 스드메 OUT! 예비부부의 억울함을 없애드리겠습니다.
- 기숙사 확충과 지역 상생형 주거지원으로 대학생 1인 1실 시대를 열겠습니다.
- 고립·은둔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실천 01

지방대학교 계약학과 등 지역인재 정착패키지로 청년이 머무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 지방대학교 계약학과 신설 촉진

- 산학 연계에서 산학 일체 개념으로 상향
- 지역의 핵심전략산업과 연계
- 대학 입학과 취업이 이어지는 계약학과 및 실무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
- 기업의 비수도권 대학 계약학과 운영비에 대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20%p 추가 가산 적용

▶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 상향 및 내실화

-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 확대
- 예외조항 재검토 및 삭제로 제도 강화

▶ 지역 우수기업 채용 연계 인센티브 도입

- 민간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시 세제 혜택 및 인건비 지원

실천 02

지역 청년 글로벌 커리어 브릿지를 구축하겠습니다.

▶ 지방대학-해외 강소기업 채용 연계형 인턴십 추진

- 지역 대학과 해외 자매도시의 우량 기업 직접 매칭, 청년들이 전공 실무를 해외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항공료, 체류비 등 지자체 일부 지원
- 단순 체험이 아닌 채용 연계를 목표, 성과 우수자에게는 현지 취업 비자 컨설팅이나 귀국 후 지역 내 유관 기업 우선 채용 가산점 부여 등

▶ 지역 혁신 인재 글로벌 리턴 창업 지원

- 해외 취업이나 인턴 경험을 쌓은 청년들이 지역으로 돌아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사무 공간, 초기 자본,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원스톱으로 지원

▶ 글로벌 커리어 가디언 네트워크 운영

- 해외에 진출한 지역 청년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와 재외동포 사회가 연계된 실시간 비상 연락 및 법률·노무 상담 시스템 구축 등

실천 03

깜깜이 스드메 OUT! 예비부부의 억울함을 없애드리겠습니다.

▶ 결혼서비스업(결혼식장 대여업 및 웨딩플래닝 관련업)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

- 표준계약서 마련 및 사용권장 등 소비자 구제 장치 마련 (가격표시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보증보험 가입·영업보증금 예치 등)
- 허위·과장 광고 금지 및 감독 방안 마련

▶ 스드메 업체 표준약관 이행 관리

- 지자체 공공예식장 운영 가이드라인에 스드메 표준계약서 및 약관을 포함시켜 관리·감독 지원

실천 04

기숙사 확충과 지역 상생형 주거지원으로 대학생 1인 1실 시대를 열겠습니다.

▶ 대학생 1인 1실 시대 추진

- 노후 기숙사 재건축·리모델링 시 1인실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
- 공용 학습·커뮤니티 공간 의무 배치
- 수도권 소재 대학 중 준공 20년 이상 노후 건물 우선 추진
- 통학 거리가 먼 타 지역 출신 학생 우선 배정

▶ 기숙사 수용률 단계적 상향 및 권역별 대학연합기숙사 구축

- 전국 평균 기숙사 수용률 30%, 수도권은 25%를 중장기 목표로 단계적 추진
- 수용률 상향 계획을 수립한 대학에 국비 보조 또는 공공기금 저리융자 지원
- 다수 대학 공동 이용형 기숙사 공급 확대
- 폐교·공공청사·철도부지 등 유휴 공공부지를 활용한 도심 접근성 확보
- 저소득층·지방출신·장애학생 우선 배정 비율 설정

▶ 지역 상생형 대학생 주거지원 확대

실천 05

고립·은둔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당사자 스페셜리스트 양성 및 초기 접근 체계 구축

- 은둔·고립을 경험한 당사자 출신 인력을 연 500명 이상 양성

▶ 공동생활 주거 지원 및 비전형적 일자리 개발

- 입주 조건: 최소 1년 이상 거주
- 시·도별 셰어하우스를 현재 서울 2개소 → 전국 16개 시·도 각 2~3개소로 확대

▶ 민관 협력 기반 고립·은둔 청년 발굴 강화

- 공공 플랫폼 한계 극복을 위한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체계 구축
-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재고립 예방을 위한 단기·장기 프로그램 연계

어르신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 누구나 찾고 싶은 열린실버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 급이 다른 백신으로 어르신 건강 챙기고 의료비 부담을 덜겠습니다.
- 치아 걱정 없는 100세 시대,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4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치매 어르신 안심 돌봄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 어르신이 일을 하셔도 연금 손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효도 밥상으로 주 7일 경로당 무료 점심을 제공하겠습니다.
- 안전하고 활기찬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 맞춤형 시니어돌봄주택을 도입하겠습니다.
- 어르신들이 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 01

누구나 찾고 싶은 열린실버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 닫힌 경로당에서 열린 플랫폼으로, 열린실버센터 설치

- 건강·문화·소통 기능을 갖춘 개방형 복합 노인여가시설 조성
- 작은도서관, 공유주방, 강당, 스포츠공간 등 지역 커뮤니티 거점 조성
- 폐원 어린이집 등 유휴시설 부지 적극 활용

▶ 활기찬 노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 건강체조, 인지훈련, 디지털 교육, 웃음치료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은퇴 전문직·경력보유 어르신의 재능기부 및 세대 멘토링 활성화

▶ 경험이 자산이 되는 어르신 참여형 운영 모델 도입

- 어르신이 직접 센터 운영에 참여하는 자치형 모델 도입
- 노인일자리와 연계한 운영·강사·상담 역할 확대

실천 02

급이 다른 백신으로 어르신 건강 챙기고 의료비 부담을 덜겠습니다.

▶ 신규 폐렴구균 백신(PCV) 국가예방접종(NIP) 도입

- 현행 소아 중심으로 제공되는 PCV 국가예방접종 어르신 대상으로 확대

▶ 어르신 맞춤형 고면역성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예방접종(NIP) 도입

- 연령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어르신 독감 예방

▶ 대상포진 백신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NIP) 지원

실천 03

치아 걱정 없는 100세 시대,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4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개수 2배 확대

▶ 국가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단계적 지원

- 치아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X선 촬영 지원으로 정확한 진단 강화

어르신의 표정, 몸짓을 읽어 보다

실천 04

치매 어르신 안심 돌봄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 치매 관리 주치의 전국 확대

- 치매와 복합 건강 문제를 빈틈없이 맞춤 관리 강화
- 인력·장비·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 지정

▶ 아침부터 저녁까지 치매 어르신 안심 돌봄 체계 구축

- 치매 어르신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시간을 최대 오후 9시까지 연장

▶ 치매 예방 및 조기검진 생활화

- 경로당, 복지관 중심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정기 무료 검사 및 이동 검진 서비스 확대

▶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 실종 예방 안전시스템 구축
- 상점, 교통, 공공시설 치매 인식개선 교육 확대

실천 05

어르신이 일을 하셔도 연금 손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 노령연금 감액제도 완화·폐지로 노령 인구의 경제활동을 증진하여 노후 소득보장 및 경제적 자립 지원
-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 개선

▶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 강화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 제도 폐지

실천 06

효도 밥상으로 주 7일 경로당 무료 점심을 제공하겠습니다.

경로당 급식 주 7일 단계적 확대

- 주말·공휴일 식사 공백 해소

경로당 급식 준비 인건비 지원 제도화

- 경로당 부식비 지원 이외에 식사 준비 인건비 지출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실천 07

안전하고 활기찬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 놀이터 전국 단위 단계적 확대 설치

- 전국 100개소 조성 후 수요에 따라 단계적 확충

노인 맞춤형 운동·여가 공간 조성

- 균형·유연성·관절·근력 강화 중심 운동기구 설치
- 휴게 벤치, 그늘막, 커뮤니티 공간 병행 조성

안전 중심 노인 친화 설계 적용

- 미끄럼 방지 바닥재, 완만한 동선, 낙상 예방 구조 적용
- 자전거·킥보드·흡연·음주 제한 등 이용 안전 기준 마련

실천 08

맞춤형 시니어돌봄주택을 도입하겠습니다.

- **신유형 고령자시설 도입을 위한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 제정**

- **일정 조건을 보완한 고령자주거시설에 요양보험 재가급여를 연계하여 중산층도 이용 가능한 합리적 가격 수준의 주거·돌봄 통합 모델 공급**

실천 09

어르신들이 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편리한 서비스와 금융사기 예방 대책이 금융기관 내부규칙에 포함되도록 명시**

-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금융취약계층 보호 관련 의무 부과**
  -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여부 확인 의무
  - 금융취약계층 금융거래, 피해신고 등 전담직원 및 창구 지정

- **금감원에 금융취약계층 전담 창구 마련**

연금개혁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 모두를 위한 연금제도를 완성하겠습니다.

■ 정부수익금을 국민연금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실천 01

모두를 위한 연금제도를 완성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 국민연금 재정목표 명확화 및 장기 균형 재정원칙 확립
- 미래세대부담 급증과 기금소진 방지를 위한 방안 확립

▶ 촘촘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 저소득층 중심 기초연금 확대
- 퇴직연금·개인연금 세금 부담 완화로 사적연금 활성화

▶ 출산·군복무 크레딧 사전지원 전환

- 출산·군복무 사유 발생 시점부터 연금 크레딧 지원

▶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 전문성과 수익성 중심의 책임운용 체계 확립
- 정부 개입 차단 및 전문성·수익성 중심 책임운용 체계 확립

실천 02

정부수익금을 국민연금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법 개정을 통해 정부 수익금을 국민연금으로 전환

- 2027년 부채 상환 완료 예정에 따라, 매년 투입되던 수조 원 규모의 상환 재원을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 마련
- 정부가 출자한 모태펀드의 투자 수익금 전액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투입하는 성장 선순환 체계 구축
- 기금의 용도 전환 등을 위한 제도적 정비 추진

내삶이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반려동물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반려동물 놀이터와 반려동물 위탁소를 확대하고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실천 01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동물병원 제공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 표준화

- 현행 공개 대상 항목을 전체 의료서비스로 확대해 비용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격 경쟁을 유도
-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목록을 비교 가능한 표준 형태로 작성
- 반려동물 인구의 알권리 강화, 과잉 진료 우려 경감, 진료비 가격 인하 통로 마련

▶ 반려동물 진료비용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펫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보장 범위와 지원 조건 개선
-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실천 02

반려동물 놀이터와 반려동물 위탁소를 확대하고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반려동물 놀이터 및 반려동물 카페 조성 확대

- 산책로, 놀이터, 카페 등 운영시설 및 공간 마련, 가족 단위 방문 시설로 운영
- 반려동물 놀이터, 공공화장실 등 공공장소 반려견 목줄 거치대 설치

▶ 반려동물 위탁소 운영 확대로 반려동물 입양 가구의 장기 외출 걱정 해소

- 특광역시와 시군 지자체 반려동물 위탁소 설치 운영, 운영비 지원
- 저소득층·취약계층 반려동물 위탁소 이용료 할인 지원
- 입소 기간 중 동물 등록, 건강, 행동 발달 상황 점검 지원

▶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행복한 양육 생태계 조성

- 비문(鼻紋) 안면인식 등 생체 정보 활용 반려동물 등록 방식 개선

▶ 유기동물 입양 지원으로 자연사·안락사 최소화

- 유기동물 입양 가구 친화 교육 훈련, 진료·사료비용 및 펫보험 가입 지원

▶ 반려동물과의 아름다운 작별 지원

- 펫로스 증후군 극복 위한 심리치료 지원
- 공공 차원의 장례시설 신설 추진

내삶이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05 | 미래국가 설계

AI·미래산업 | 에너지 | 과학·기술 | 교육 | 기후·환경
정치·행정·지방자치 | 규제개혁



AI·미래산업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 국내생산 촉진세제(한국판 IRA)를 도입하여 산업을 지키고,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 초격차를 넘어 반도체 초강대국을 만들겠습니다.
- 글로벌 AI 산업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K-AI 브레인 리턴 프로젝트로 AI 인재를 국내로 복귀시키겠습니다.
- 창작자와 함께 성장하는 AI 산업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 지방대학에 AI 연구 인프라 및 전력 공급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국가 핵심 자원 관리 체계를 강화해 자원전쟁 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 경기남부에 반도체 신공항·철도 건설하여 미래산업 물류네트워크를 만들겠습니다.

실천 01

국내생산 촉진세제(한국판 IRA)를 도입하여 산업을 지키고,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 국내생산 촉진세제(한국판 IRA) 도입

- 국가전략기술 및 고율 관세 등 외부 충격으로 제조업 공동화 고위험군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
- 국내 생산 및 판매 실적에 연동한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제 지원 구조 개편

▶ 국내 생산 기반 중심 지원체계 구축

- 국내 부품·소재·장비 사용 비중 등 국내 구매 요건을 반영하여 지원 기준 설계
- 국내 생산 생태계 전반으로 파급되는 후방효과를 고려한 지원체계 정비

▶ 중·장기 생산 투자 유도

- 기업의 국내 생산 기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장기 지원체계 마련(10년 이상)
- 투자 이후 생산·가동까지 연계되는 지속형 세제 지원 구조 구축

실천 02

초격차를 넘어 반도체 초강대국을 만들겠습니다.

▶ 반도체 산업 R&D 분야 유연한 근로 시간제로 지속 개선 추진

▶ 완전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규제 프리존 지정

- 특정 전략기술(AI, 차세대 반도체) 특구 내에서는 법령상 금지 사항 외 모든 비즈니스 모델의 실증 및 사업화를 무허가·무신고 원칙으로 허용

▶ 반도체·AI 펀드 투자 예산 확대

- 5년 간 100조 원으로 확대

▶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 관련 예산 및 정책 집중 지원 확대

▶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 기술 유출 방지 강화

- 반도체 학부 및 대학원 정원 확대 및 관련 세부 학과 신설로 전문 인력 양성
- 반도체 전문 기술 유출 방지 위한 「(가칭)경제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한 입법·사법·행정적 대응 강화

▶ 반도체 수출 1,000조 원 프로젝트 등 민관 협력 국가적 지원 프로젝트 선제적 기획 및 추진

실천 03

글로벌 AI 산업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피지컬 AI 산업 세계 1위 선도국가로 도약

- 기술 데이터, AI 데이터 축적을 통해 거대 액션 모델 체계 수립하여 노동력 부족 산업 기반 유지
- 세계 최대 피지컬 AI 산업 허브 및 실험·연구·학습·창작·제작 라이브러리 조성

▶ 전국 권역별 중점 산업 인프라 연계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 반도체·AI·데이터센터 연계 혁신 클러스터 조성, 규제 완화를 통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유치 유도

▶ 2030년까지 AI 데이터 센터 전국 300개 이상, 국가 AI 데이터센터 권역별 건립

▶ 산업계 AI 도입 관련 노동계와 상생 협의체 구성, AI 산업 윤리위원회 도입

실천 04

K-AI 브레인 리턴 프로젝트로 AI 인재를 국내로 복귀시키겠습니다.

핵심 AI 인재 대상 파격적 세제 혜택 및 보상 체계 정상화
- 해외 우수 AI 연구자 및 개발자가 국내 복귀 또는 취업 시 일정 기간 소득세 최대 50%까지 감면
-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대폭 상향 및 근로 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적용 범위 확대

AI, 반도체 등 첨단 신기술 연구개발(R&D) 직군 근로시간 유연화

국가 주도 초거대 AI 컴퓨팅 인프라 무상·반값 지원
- 국가 지정 핵심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 AI 데이터센터 자원을 최우선으로 할당
- 5대 권역 AI 컴퓨팅 파워 허브와 연계하여 지역에 정착하는 AI 인재와 기업에 클라우드 및 전력 비용을 지원

글로벌 톱티어 AI 비자 및 가족 정주 여건 패키지 지원
- 본인 및 가족의 영주권 취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 비자 신설
- 주거 및 자녀 외국인 학교 입학 지원 등

실천 05

창작자와 함께 성장하는 AI 산업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권리자 사전 승인권(Opt-in) 보장
- AI 학습 목적으로 저작물 이용 시, 사전에 콘텐츠 권리자의 허락 의무화

저작물 학습 여부 확인 요청권 신설
- 권리자가 AI 관리·운영 주체에게 자사 저작물의 데이터 학습 이용 여부를 열람 및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보장

풀뿌리 권리자 보호 실현 및 콘텐츠 보호 대상 전면 확대
- 지역 언론 및 지역 거점 창작자까지 보호하는 저작권 등 법적 대책 마련

시장 왜곡 방지 규정 마련
- AI 요약 서비스 제공에 따른 원문 기사 트래픽 이탈 및 언론사의 구독·광고 수익 훼손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도입

저작권 침해 단계별 대응 체계 구축
- 표준 계약서, AI 저작권 전담 기구 설립 등 저작권 침해 예방 제도 신설
- 침해 발생 시, 즉각적인 사용 중지 조치 및 증거 보전 절차 마련침해에 대한 신속 구제 및 분쟁 해결 절차 도입

정당한 보상 체계 확립
- 콘텐츠 이용에 대한 합당한 대가 산정 및 지급 보장제 마련
- AI 학습 내용에 이용한 언론사 링크, 창작자 링크 등 표기를 통한 트래픽 선순환 제도 도입

실천 06

지방대학에 AI 연구 인프라 및 전력 공급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권역별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에 AI 연구 인프라 및 전력 공급 지원 대책 마련

- 지방 소재 대학 AI 연구시설(GPU 연산센터, AI 대학원 실습실 등)에 산업용전기 특별요금을 적용
- 연구 목적 전력 사용분의 5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
- 연구 전력 증설 신청 시 90일 이내 원스톱 처리를 의무화
- 고전력 설비 구축 비용은 국고·지자체·대학이 매칭으로 분담

실천 07

국가 핵심 자원 관리 체계를 강화해 자원전쟁 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 핵심 자원 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

- 글로벌 핵심 자원 공급망 다변화 구축
- 1조 원 펀드 조성 및 보조금 지원 등 민관의 자원 개발 지원 확대
- 핵심 자원 확보 예산 확대 및 분야별 민·관 전문 인력 양성

▶ 핵심 자원의 공급 안정화 및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기 대응 협력체계 강화

- 정부 차원의 핵심 광물 비축 확대
- 핵심 광물 무역 가격 하한제 등 핵심 자원 수요·공급 협력 체계를 통한 자원 안보 동맹 강화

실천 08

경기남부에 반도체 신공항·철도 건설하여 미래산업 물류네트워크를 만들겠습니다.

▶ 경기남부 신공항 건설

- 경기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통해 반도체 전용 물류 터미널 확보
- 청주공항과의 연계를 통한 중부권-수도권 통합 항공 물류 네트워크 구축

▶ 반도체-여객 복합 철도망 구축

- 경기남부 신공항에서 오산세교(LH 3기 신도시 건설예정) ~ 동탄 ~ 용인(삼성전자반도체단지 ~ SK반도체단지)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
- 잠실 ~ 청주공항, 잠실 ~ 청주공항 동탄연결선 건설

▶ 3기 신도시(오산세교) 및 배후도시 교통 인프라 통합

- LH 3기 신도시 개발과 연계, 오산세교지구 내 철도역 신설 및 환승 센터 구축
-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주거지(동탄·용인 등)와의 15분 생활권 형성

▶ 「(가칭)경기남부 반도체 공항 건설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내삶이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에너지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 원자력과 에너지믹스로 폭발적인 전력수요에 대비하고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신규 원전 추가 건설 및 K-원전 수출 시대를 열겠습니다.
- SMR 파운드리(위탁생산) 산업을 육성하고, SMR 종주국 지위도 회복하겠습니다.
- 원자력 인력 10만 명 육성과 동해안 원전벨트 조성으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겠습니다.

실천 01

원자력과 에너지믹스로 폭발적인 전력수요에 대비하고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상생하는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

- SMR, 수소, 배터리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위한 10조 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기금 조성
- 원전 계속 운전 심사 간소화 및 최적 안전 가동 실현
-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송·배전망 보강
-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으로 지역 분산형 전원 체계 구축 및 원전 클러스터 지원 확대

▶ SMR 실증·상용화 프로젝트 추진

▶ 에너지 정책 자율권 확대

-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직접전력구매(PPA) 허용 및 확대
- 산업단지 중심 에너지 자립률 극대화

▶ 에너지저장장치와 양수발전, 수요반응, AI 스마트그리드 고도화를 통한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 마련

▶ 무탄소에너지 산업도시·산업단지의 전국 권역별 균형 조성

- 원전과 재생에너지 지역별 특화 에너지 산업도시·산업단지 조성

실천 02

신규 원전 추가 건설 및 K-원전 수출 시대를 열겠습니다.

▶ 신규 원전 확대 및 SMR 상용화 추진

-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2기에 더해 대형 원전 4기와 SMR 2기 추가 건설
- SMR은 신속히 실증·상용화하는 프로젝트 추진
-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확립

▶ K-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

- 금융·외교·기술을 결합한 패키지로 원전 수출 지원

▶ K-원전 수출을 국내 일자리 창출과 건설·플랜트·기자재·금융·운영정비 등 산업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지는 국가 경제 프로젝트로 추진

- 원전 수출 유망국 협력 확대를 통한 한국형 원전 10기 지속 수출 지원 강화

실천 03

SMR 파운드리(위탁생산) 산업을 육성하고 SMR 종주국 지위도 회복하겠습니다.

▶ SMR 위탁생산 지원기반 강화

- SMR 위탁생산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인력·금융·세제·투자 활성화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타 특례(우선 선정, 면제) 등 기본계획 수립
-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 통한 재정지원 기반 마련

▶ 글로벌 파운드리 클러스터 육성

- 생산과 수출의 시너지 효과 큰 지역 중심으로 클러스터 조성
- 해외 주요 SMR 업체 유치 지원
- SMR 인프라(제작지원센터 등) 신속 조성

▶ SMR 연구개발·실증사업을 통한 SMR 상용화 촉진

▶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 원전산업발전기금 신설, 수출 지원, SMR 상용화 촉진 등

미래국가설계

실천 04

원자력 인력 10만 명 육성과 동해안 원전벨트 조성으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겠습니다.

▶ 원자력 인력 10만 명 육성 및 연구 환경 혁신

- 설계·토목·계측·방호 등 원전 전 분야를 아우르는 원자력 인력 10만 명 육성 체계 구축

▶ 동해-동남해 벨트 원전 직접전력구매(PPA) 및 반값 전기요금 실현

- 동해안 신규 원전 4기 및 SMR 단지 우선 건설을 통해 인근 입주 기업에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kWh 수준 우선 적용 추진
- 기존 화력발전소 부지를 SMR 단지로 전환

▶ 동해안을 청정 수소 생산 거점으로 조성

- 수소 생산 지원을 위한 월성 1호기 및 신규 대형원전, SMR 활용
- 원전(APR1400, SMR)을 활용한 수전해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경제성 있는 청정 수소 대량 공급

내삶이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과학·기술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 과학기술예산 7% 확보를 통해 과학기술 G3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과학기술 인재 연구보상 혁신 패키지를 도입하겠습니다.
- 과학기술인 연구 몰입 지원 풀 패키지를 도입하여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성실한 실패가 자산이 되는 연구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실천 01

과학기술예산 7% 확보를 통해 과학기술 G3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국가 과학기술 R&D 예산을 7%수준으로 확대

실천 02

과학기술 인재 연구보상 혁신 패키지를 도입하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체계 개편
- 직무발명보상금을 현행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소득 구분 변경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적용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분리과세 대상으로 변경하여 종합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배제

전략인재 소득세 감면 도입
- 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2030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최대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지방 정착 과학자를 위한 리서치 실드
- 비수도권 산단 연구직 종사자에게 취득세· 재산세 감면 및 거주 기간 비례 소득세 추가 공제 혜택 부여

오픈 인센티브 매칭 펀드 지원
- 기업이 대학 연구 개발에 출연한 펀드에 대해, 기업은 법인세 공제, 수혜 연구자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생 생태계 구축

테크 스타트업 스톡옵션 과세 이연
- 실제 주식 매각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여 초기 자금 부담 없이 창업 도전 지원

연구개발 직군 연봉 표준 인상

실천 03

과학기술인 연구 몰입 지원 풀 패키지를 도입하여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출산·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는 연구 공백 자동 보정 평가제도 도입
- 출산·육아·가족돌봄 기간을 연구 평가에서 자동 제외하여 경력 단절 방지
- 최근 N년 실적 → 실 연구기간 N년 실적 방식으로 전환
- 출산·돌봄 시 책임연구자 지위 유지 및 연구 수행 분담 체계 구축
- 연구기관 단위 실험· 데이터· 행정 지원 인력 상시 확보를 통해 연구 연속성 지원 인력풀 제도화
- 기관 단위 돌봄 대응 시스템 도입

기관 평가에 돌봄 친화 지표 의무 반영
- 여성 연구자 이탈률·경력유지율·복귀 후 유지율 지표화 및 평가 결과를 예산 및 신규 과제 배분과 연계
- 남성 연구자의 돌봄 참여도 함께 관리

전문연구요원 규제 전면 철폐
- 박사 학위 취득 필수 조건, 사후 1년 의무 종사 폐지
- 중소기업·스타트업 선택 시 복무 기간 6개월 단축 혜택 부여
- 주 40시간 총량 내 자율 근무 방식 도입

산학연 인력 순환 확대를 위한 겸직 및 파견 확대
- 산학 공동연구 - 인력교류 연계 프로그램 도입
- 연구자의 중소기업·스타트업 겸직 및 파견 제도 확대
- 산학 인력 매칭 시스템 운영 등 인력 이동 지원 플랫폼 구축

실천 04

성실한 실패가 자산이 되는 연구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 성실한 실패 인정으로 도전적 연구 분위기 조성

- 혁신 과제에 적합한 성과지표 개발 및 적용, 도전적 과제 대상 성공률 목표 하향 조정 및 평가 과정 모니터링
- 실패 과정의 노하우와 축적된 DB를 후속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안정형 국가연구재정 체계 구축

- 정부출연금 단계적 100% 지급 추진

▶ 연구자 중심 Bottom-up 연구기획 체계 도입

- 전략연구단 사업 연구자 참여 확대, 현장 연구자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 K-연구지원 시스템 도입 및 행정절차 간소화

- 국가 R&D 수행 관련 회의비, 자문비 등 일상적 연구비에 대한 원칙적 자율 사용 허용 및 증빙 최소화
- 금지 항목만 명시해 연구비 집행 규제 대폭 간소화하고, 그 외 집행은 연구 책임자 자율 판단 일임

내삶이올라갈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교육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 공정한 공교육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원어민과 함께 하는 우리 아이 첫 영어 놀이터, 공교육이 함께 합니다.
-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와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아이 키우기 좋은 우리 동네, 교육특구가 지역의 자부심을 높이겠습니다.
- 학생 맞춤 교육으로 가능성을 깨우고, 통합 지원으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거래된 문항이 실력을 이길 수 없도록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뽑겠습니다.
-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실천 01

공정한 공교육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서울런 모델 등을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맞게 운영

- 진학·진로·디지털·인문소양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전인적 성장 지원
-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공공기관 활용 등을 통한 교육 콘텐츠 제공
- 학습의 빈틈을 메우는 촘촘한 온·오프라인 멘토링 제공
-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 운영
- AI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AI 콘텐츠 강화
- AI 기반 진로 탐색 및 진학 코칭

수험생 전용 대입 원스톱서비스 플랫폼 구축

- 입시모의지원, 원서접수, 합격예측, 진학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통합 제공

실천 02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교권 보호 강화와 교원·학부모 소통 방안 지속 추진

- 악성민원 대응 체계 마련
- 과중한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 학교 안전사고 및 현장체험학습 관련 면책 기준 마련
- 교원 대상 심리 상담 및 치료 강화,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실천 03

원어민과 함께 하는 우리 아이 첫 영어 놀이터 공교육이 함께 합니다.

▶ 유아 대상 영어 원어민 교실 운영

- 유치원 방과후·어린이집 특별활동 활용하여 진행
- 국립국제교육원의 원어민 교사 파견
- 국비 및 지자체 매칭으로 교실 운영비 지원

미래국가설계

실천 04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와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둘째부터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 추진

- 다자녀의 개념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 물가상승률 고려하여 국가장학금 금액 단계적으로 확대

▶ 천원의 아침밥 참여 학교 및 학생 수 점진적으로 확대

실천 05

아이 키우기 좋은 우리 동네, 교육특구가 지역의 자부심을 높이겠습니다.

▶ 지역의 공교육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 정주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특구 선도지역을 확대

- 학교설립부터 교원인사, 학교 시설 및 폐교 활용, 교육과정 등 지역 특성 맞춤형 특례를 적용
- 학생 안전과 교육을 최우선에 두고 체육관, 도서관 등 학교복합시설 운영
- 폐교 등 유휴시설의 지역 맞춤 용도로 활용 확대

실천 06

학생 맞춤 교육으로 가능성을 깨우고 통합 지원으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학생 중심 맞춤통합 지원으로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

-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 학대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통합 접근
-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 교원의 평가권과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위기학생 조기 진단·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 상담·치료 인프라 확충과 학부모 협조 체계 마련
- 단계별로 문해력 최소기준 설정,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보강 프로그램 제공
- 경계선 지능 AI 기반 진단도구 보급, 교원과 학부모가 간편하게 사용, 조기발견 및 적시 조치 가능

▶ 장애학생 맞춤 교육 강화

- 특수학급 설치기준 완화, 교사 수급, 학급 시설 및 공간 등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 수립

▶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교원 업무 부담 최소화

▶ 통학 여건이 어려운 권역 내 학생들의 등·하교 지원 강화

실천 07

거래된 문항이 실력을 이길 수 없도록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뽑겠습니다.

▶ 입시 문항을 거래한 사교육 강사(사교육업체 운영자, 임직원 포함) 처벌 및 직무배제 등 추진

▶ 학원 정보 공시제 학원 알리미 구축

- 교습정지·폐지명령 등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벌금, 과태료 등 주요 이력 공시

실천 08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산업체 육성을 위한 직업교육 연계 시책 제도화

- 직업교육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범정부적 추진 기반 마련
- 지자체와 교육청, 산업계, 대학이 협심하여 교육과정 설계 등

▶ 대입 동일계 특별전형 비율 상향

- 직업계고 졸업자의 동일계 대학 진학 기회 확대

▶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실습 환경 마련

▶ 직업계고 졸업자 채용 확대 및 제도 개선 추진

- 지방공기업 고졸 채용 목표제 확대 등 공공부문 선도 채용 강화

▶ 산업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으로 실험·실습 교육의 질 확보

내삶이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기후·환경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 지역별 맞춤형 기후테크를 육성하겠습니다.
- 기후보험으로 야외근로자의 생계를 지키겠습니다.
- 탄소중립·ESG 대응으로 지역기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실천 01

지역별 맞춤형 기후테크를 육성하겠습니다.

▶ 지역별 기후테크 발굴 및 육성 패키지 설계

- 지역별 기후위험과 산업 특성에 맞춘 규제특례·테스트베드·공공조달·데이터 개방·산학연 연계 사업화 지원
-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강원·제주권에 권역별 기후테크 혁신거점을 구축해 지역의 기후난제 발굴, 실증, 조달, 확산을 총괄 지원

▶ 지역 맞춤형 기후테크 도입

- 도시권은 폭염·열섬·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 산업단지는 공정 효율·전력피크 관리·탄소감축 솔루션
- 농산어촌은 물관리·스마트농업·산사태 예측·복원
- 해안권은 침수 대응·연안 관리·재난 예측
- 산림·내륙권은 산불 예측, 산림복원, 가뭄 대응

▶ 지역산업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둔 생태계 조성

- 지역별 현안에 맞는 문제해결형 기후테크 실증과제를 5년간 300개 추진

실천 02

기후보험으로 야외근로자의 생계를 지키겠습니다.

▶ 폭염·폭우·한파 등 이상기후로 근로소득을 상실한 야외 공공근로자의 소득 보장

-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관리·발주하는 공공건설, 환경미화, 공공근로, 산림·재난예방 등 기후노출 직무가 분명한 공공 야외근로자 약 3만 명 기후보험 도입
- 민간 건설, 농촌근로자, 배달라이더, 물류노동자 등 기후 취약계층 대상 기후보험 확대

▶ 기후 취약계층과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지수형 보험 개발

- 기후보험의 보장범위를 강화하고 보험료 부담은 완화
- 기온, 기간 등 기상청 발표 공식 기준요건 충족 시 정액 지급

실천 03

탄소중립·ESG 대응으로 지역기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철강·석유화학·기계·전자 등 에너지 다소비 또는 공정 효율화 수요가 큰 업종 대상 에너지 전환 인프라 구축

-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집중된 지역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 비용 부담 완화 및 에너지효율 극대화
- 산업단지 내 공동형 태양광 발전소·ESS 설치 지원 확대
- 폐열·폐증기 재활용 플랫폼 구축·확산 지원

▶ 스마트생태공장 400개 구축

- 탄소·에너지 사용량 실시간 측정·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 탄소중립 역량강화 교육 및 ESG 연계

- 대학교, 테크노파크 등과 협력하여 아카데미 운영, 기업 자체 전문인력 및 전문 컨설턴트 양성·보급
- 탄소회계, 배출인벤토리 작성, ESG 정보공시, 공급망 보고(CDP) 실무과정 제공

▶ 탄소감축 성과 인증제 도입 및 민간투자 연계

미래국가설계

정치·행정·지방자치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 국회의사당과 청와대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 시키겠습니다.
- 국회와 지방의회간 협력 강화하고 지방의회 입법 제안창구 신설하겠습니다.
-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으로 교육감 선거제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 어렵고 복잡한 정책 지원금, 클릭 한번으로 받게 하겠습니다.
- 국책사업 예산 현미경을 구축하겠습니다.
- 지자체 여권 발급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행정 최일선 이·통장들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수당을 인상하겠습니다.
- 지방정부의 자주재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실천 01

국회의사당과 청와대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 시키겠습니다.

▶ **국회세종의사당 일부 이전이 아닌 여의도 국회의사당 잔류 없는 완전 이전**

- 세종시를 행정타운을 넘어 중부권 핵심도시로 육성하여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 불균형 해소 기반 마련

▶ **완전 이전에 따른 여의도 의사당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마련을 위해 서울시 등과 대책기구 구성**

- 여의도내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실질적 활용계획 즉시 착수

▶ **청와대 기능 자체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

실천 02

국회와 지방의회간 협력 강화하고 지방의회 입법 제안창구 신설하겠습니다.

▶ 지방의회에 대한 교육 및 협력 기능을 대폭 강화

- 지방의회별로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확대 시행

▶ 지방의회의 입법 개선 과제 관련 국회 공식 접수창구 신설

- 접수 후 특정 기간 내 국회 소관 상임위 검토 의무화

실천 03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으로 교육감 선거제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 시·도지사 선거시 교육감 후보자 지명 등 제도 개선

실천 04

어렵고 복잡한 정책 지원금 클릭 한번으로 받게 하겠습니다.

AI 기반 개인 맞춤형 정책 추천 서비스 구축

정책 공고문 AI 기반 구조화 및 자동 요약 제공

- 행정·법령 용어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자동 요약

선택 정보 입력으로 세분화된 추천 및 신청 연계

실천 05

국책사업 예산 현미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분산원장기술 활용한 투명한 기록 보관

-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디지털장부에 국책사업 내역 기록

예산 현미경 지도 서비스 제공하여 대국민 공개

- 복잡한 회계 장부 대체,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의 지도에서 지역사업 확인

고무줄 예산 자동경보 시스템 도입

- AI 자동감지시스템이 사업 변동을 탐지·경보

실천 06

지자체 여권 발급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여권 발급 기간 단축 및 야간·주말 서비스 상설화

▶ 스마트 여권 민원 통합 플랫폼 구축

- 구청 방문 전 현재 대기 인원을 확인하고 모바일로 번호표를 사전 발행 도입
- 민원실 내 사진 규격 적합 여부를 AI가 즉석에서 판별해주는 키오스크를 설치
- 업무 시간 외 본인 인증 후 여권을 찾아갈 수 있는 24시간 무인 수령함 운영

실천 07

지역행정 최일선 이·통장들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수당을 인상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법에 행정동의 통장, 행정리의 이장 설치 규정을 명확히 규정

- 통장·이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이·통장 회의참석수당을 5만 원으로 인상

실천 08

지방정부의 자주재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지방교부세 법정률 22% 수준으로 인상

- 교부세 산정 시 인구수 비중을 줄이고, 인구감소지수, 노령화 지수, 면적 등 지방 소멸 위기를 반영한 수요 산정 지표 비중 강화

내삶이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규제개혁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 규제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하겠습니다.

■ 규제자유특구 확대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실천 01

규제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하겠습니다.

▶ **벤처기업 발굴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 외부출자(40%) 및 해외투자(20%) 비중 제한 완화

▶ **신산업에 있어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관습적 규제가 기업혁신을 발목잡지 않도록 개선**

-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대전환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의무화**

▶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규제하는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 양산 방지 시스템 마련**

실천 02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 규제자유특구 확대 및 고도화

- 현행 31개 규제자유특구를 늘리고 분야 확대
- 단순 실증을 넘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강화

▶ 법인세 및 투자 세액공제 강화

- 특구 내 입주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국제 평균 수준(20% 이하)으로 인하
-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5,000만 원 규모의 소득세 감면 혜택 제공

▶ 초광역 연계 특구 신설

- 개별 지자체 단위를 넘어 광역·전국 단위 연계 특구 신설하여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글로벌 혁신 특구 강화

-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 글로벌 인증 컨설팅 및 해외 실증 기회 제공
- 해외 주요 대학 및 연구소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하여 세계적 기술 수준으로 격상

내삶이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06 | 함께하는 복지



약자와 함께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국민채움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장애인이 삶의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장애인 근로·사업 소득 전액 공제로 장애인의 자립을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어디서나 끊김없는 여정, 무장애 관광 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 장애인 교통 프리패스 통합 바우처를 도입하겠습니다.
-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장애인 지원주택·주거생활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가족돌봄수당 및 간병 가족 휴식 지원 확대를 통해 가족 간병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 다문화 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실천 01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국민채움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서울 디딤돌 소득을 모델로 하는 국민채움소득 전국 확대**

- 수입이 늘어나도 지원금이 끊기지 않고, 수입과 지원금이 합쳐져 전체 총소득은 무조건 늘어나도록 설계

실천 02

장애인이 삶의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장애인지 정책 및 예산 운영 체계 확립

- 주거·교통·문화 등 주요 정책에 장애영향평가 도입
- 주요 예산사업의 장애인 삶 기여도를 분석·평가하는 장애인지 예산 제도 신설

▶ 장애인정책위원회 실효성 강화 및 당사자 참여 확대

- 회의 개최 정례화·정책 집행 현황 상시 점검
- 장애인 위원 비중 상향으로 당사자 중심 정책 환경 구현
-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정책 이행 감독·평가 기능 내실화

실천 03

장애인 근로·사업 소득 전액 공제로 장애인의 자립을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 생계급여 결정 위한 소득평가액 산출 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의 근로·사업소득 전액 공제

▶ 최저생계비 및 소득인정액 산출 과정에서 장애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공제 항목에 반영

- 보조기기 구입·유지비, 재활기관 이용료, 간병비, 교통비, 특수 식비 등 장애·질병에 따른 가구 특성별 지출요인을 충분히 반영

▶ 장애인 수급자의 의료급여 유예 제도 마련

-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던 장애인이 근로활동을 시작해 수급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2년간 의료급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 마련

실천 04

대한민국 어디서나 끊김없는 여정 무장애 관광 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 무장애 관광 특구 조성

- 숙박·상업·교통 거점을 통합한 대규모 무장애 관광 특구 조성
- 도시 전역의 끊김 없는 이동과 관광의 연속성 확보
- 베리어프리 인증 민간 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인프라 투자 시 세액공제·융자지원 등으로 인센티브 제공
- 저상 셔틀 및 AI 기반 특별교통수단 촘촘히 배치

▶ 디지털 안심 가이드 구축

- 관광 플랫폼 내 경사로·장애인 화장실 등 배리어프리 정보공시 의무화

▶ 장애주류화 관광 조례 제정 및 데이터 행정 시스템 구축

실천 05

장애인 교통 프리패스 통합 바우처를 도입하겠습니다.

▶ 장애인 교통 프리패스 통합 바우처 도입

- 월 최대 20만 원(중증 동승 보호자 포함 시 최대 40만 원) 용도지정형 바우처 지급
- 지하철·버스·바우처 택시·UD택시·장애인콜택시·자가용(유류비) 등 사용
- 바우처 택시 전국 확대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기반 대중교통 자동 할인 시스템 구축

- 스마트폰만으로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는 자동 할인·무임 시스템 및 기기 도입
-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과 지자체·교통공사 시스템 표준화

▶ AI 기반 스마트 배차 시스템 구축

- 특별교통수단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연차별 확충 및 UD택시 활성화
- 실시간 수요 분석을 통한 스마트배차 및 통합 콜센터 운영으로 중복·비효율 제거
- 앱을 통해 예상 대기 시간을 실시간 확인하는 고도화된 예약 시스템 구축

실천 06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 문턱 없이 이용하는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 장애인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지자체 설치 의무화 추진

▶ 상담-평가-임대-사후관리까지 통합 제공하는 보조기기 원스톱 거점센터 구축

- 스마트 IoT·문화여가생활을 위한 게임 접근 플레이존 운영
- 가족 힐링 및 커뮤니티 공간 마련

▶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 트랙 및 국산 보조기기 실증랩 운영

- 체험형 교육·산업 테스트베드 기능 강화

실천 07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장애인 지원주택·주거생활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 일부를 중증장애인 지원주택으로 지정·리모델링

▶ 지역 내 서비스 수행기관 추가 지정 및 전담인력 확충

실천 08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적 기반 마련

- 경계선지능인의 정의 및 국가 책임 명확화
- 생애주기별 교육·고용·상담 지원체계 구축

▶ 경계선지능인 검사비용 지원

- 본인 및 가족 요청 시 검사비 지원을 통해 조기 발견 기반 마련
- 경계선지능인 검사 시, 검사기록 삭제권 보장

▶ 경계선지능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

-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일경험 기회 제공 및 직무 적응 지원

▶ 사례관리 중심 통합지원체계 구축

- 사회복지사 중심 전담 사례관리 체계 운영
- 교육·직업훈련·상담·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 연계

실천 09

가족돌봄수당 및 간병 가족 휴식 지원 확대를 통해 가족 간병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가족돌봄수당 확대

- 가정에서 환자 등 가족을 돌보는 가족에게 최소 월 50만 원 지급
  (65세 이상 배우자는 100만 원 지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가족요양비 제도와 가족인요양보호사 특례 통합
- 도서·벽지에 한정하지 않고, 요양보호사 여부 무관하게 지원
  (가정 내 돌봄의 질 모니터링 위해 주 1회 주간보호시설 이용 의무화)

▶ 간병 가족 휴식 지원 확대

- 요양보호가족 돌봄자원봉사단이 틈새 돌봄 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등급 받지 않아도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 돌보는 가족 신청 가능

실천 10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 공공의료기관 및 국립대병원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 중증환자 전담병실 활성화

- 전담병실 승인 기준 완화 및 시설개선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 지원
-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참여 병동 수 상한 폐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적 기반 강화

- 「의료법」 개정 통한 공공의료기관 서비스 참여 의무 이행강제 및 지원근거 마련
- 간호사 배치기준 및 전담병실 운영 기준 정비

실천 11

다문화 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 돌봄 지원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추가 지원 대상에 다문화가족 추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확대

▶ 다문화청소년 교육 및 진로지도 지원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확대
- 다문화청소년 대상 상담, 진로설계 지원 센터 확대

▶ 다문화청년 인재양성 및 다문화 이해 교육 확대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을 개발하여 미래·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글로벌시대 문화융합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교육 및 프로그램 확대

국민 건강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 전국 방방곡곡 건강 1번지,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 응급실 뺑뺑이 해소로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 제2의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사태가 없도록 예방접종 모든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외로움·고립으로부터 국민 마음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 의료 공백 없는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시니어 간호사를 현장으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 국민 건강의 최전선 보건소에 숙련된 간호조무사를 더하겠습니다.
-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가까운 진료, 똑똑한 관리, 안전한 내 정보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로 건강 강국 대한민국을 열어가겠습니다.
- 혈압·당뇨에 대한 개인맞춤형 스마트 책임관리를 실현하겠습니다.

실천 01

전국 방방곡곡 건강 1번지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 권역별 보험자병원(건강보험공단 직영) 건립

- 수도권 외 영남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1개소씩 추가 건립
- 기존 지방의료원 등 전환 우선 검토
- 필수의료(응급·외상·분만·소아·감염병) 기능 중심 운영체계 구축

▶ 지역의대 신설 추진

-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을 고려

실천 02

응급실 뺑뺑이 해소로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심 이송·전원 컨트롤타워 확립

-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지정·조정 권한 부여

▶ 이송병원 선정·수용거부 기준 정비

- 중앙응급의료센터·119의 이송병원 선정 역할을 명확화
- 수용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 구체화
- 거부·기피 시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 응급의료진 보호 및 배후진료 역량 강화

-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 면책 강화
- 응급실 처치 이후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도록 배후진료 기반 강화

실천 03

제2의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사태가 없도록 예방접종 모든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국가 예방접종 통합관리체계 구축

- 5년 단위 예방접종 기본계획 수립
- 예방접종 실시기준과 방법 체계화
-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해 접종 이력, 이상반응, 피해보상 등 통합 관리

▶ 백신 품질 이상 발생 시 신고 의무화

▶ 국민의 알권리 보장 위해 백신 품질 이상 신고 현황과 조치 결과 대국민 공개

- 이물신고백신 및 동일제조번호백신 접종 시, 접종자 통지의무 및 이상반응 인과성 재심 청구권 부여

▶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격상 등 백신 피해 보상 강화

- 현행 질병관리청 소속의 피해보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실천 04

외로움·고립으로부터 국민 마음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 전국민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횟수 확대

- 최소 12회로 확대(현행 대비 50% 확대)
- 담당 상담사 또는 정신의료기관의 추가 상담 필요 소견 확인 시 연 1회(8번) 추가 연장 허용

▶ 동네의원·보건소에서 다함께 사회적 처방 발행

- 운동·문화·자조모임·봉사 등으로 연결

▶ 연계 코디네이터 배치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강화

- 의료-보건-고용-주거 서비스 담당 연계 코디네이터 배치
- 단기 집중 프로그램, 자살위험군 즉시 연계, 야간 상담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강화

▶ 고립 위험군(독거, 중장년 1인 가구 등) 선제 발굴

실천 05

의료 공백 없는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의료취약지 및 군 의료 공백 방지

- 공중보건의사·군의관 지원율 제고를 통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과 군부대의 필수의료 공백 예방
- 현역 입대 기피 현상 완화 및 의료인력의 지역사회 안정적 배치 실현

▶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장교 의무복무기간 단축

-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현역병과의 병역의무 형평성 확보

▶ 군사교육소집 기간 복무기간 산입

- 입영 후 받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법률 개정

실천 06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시니어 간호사를 현장으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 시니어 간호사 경력형 일자리 재취업 프로그램 도입

-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특화 모델로, 경력단절 및 은퇴 간호사를 대상으로 방문간호 등 전문 교육 실시

▶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개편을 통한 시니어 간호사 특화 모델 구축

- 시니어 간호사가 재택간호, 건강상담 등 지역사회 건강돌봄 업무에 전문성을 살려 참여할 수 있는 특화 모델 운영
- 지역 재택간호센터 및 보건소 등 공공기관과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

실천 07

국민 건강의 최전선 보건소에 숙련된 간호조무사를 더하겠습니다.

▶ 보건소·보건지소 간호조무사 배치 기준 강화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최소 2명 이상의 간호조무사 배치 기준 법제화

▶ 간호사-간호조무사 팀 기반 보건서비스 체계 구축

- 간호사는 고도의 사례 관리, 간호조무사는 현장 실무에 집중

▶ 간호조무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경력 개발 지원

함께하는 복지

실천 08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장기근속 지원 실효성 강화

- 장기근속 10년 지급 구간 신설
- 단계별 월 30만 원 수준까지 지급수준 상향
- 방문형·입소형 간 격차 완화
- 5년 근속 시 3일, 10년 근속 시 5일 이상 유급 근속휴가 도입

▶ 권익보호 실제 작동 체계 구축

- 권익지원센터에 법률지원 기능 의무화
- 폭언·폭행 등 권익 침해 발생 시 즉시 법률지원과 기관 연계 보호 시스템 구축
- 신고 시 불이익 금지 및 신고자 보호 장치 강화

▶ 교육·경력개발 국가 책임제 도입

- 연 1회 이상 의무교육 및 교육비 국가 지원

실천 09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장기근속 인센티브 의무화

- 5년·10년·15년 근속 시 단계별 장기근속수당 지급 근거 법제화
- 5년 근속 시 3일, 10년 근속 시 5일 이상 유급 근속휴가 의무화

▶ 권익보호 실제 작동 체계 구축

- 권익지원센터에 법률지원 기능 의무화
- 폭언·폭행 등 권익 침해 발생 시 즉시 법률지원과 기관 연계 보호 시스템 구축
- 신고 시 불이익 금지 및 신고자 보호 장치 강화

▶ 교육·경력개발 국가 책임제 도입

- 연 1회 이상 의무 교육 및 교육비 국가 지원
- 경력별 맞춤형 전문 교육·승급 체계 구축
- 교육 이수 시 수당 또는 승급과 연동

실천 10

가까운 진료, 똑똑한 관리, 안전한 내 정보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로 건강 강국 대한민국을 열어가겠습니다.

▶ 개인 건강정보 전송요구권 확립

- 본인의 진료기록을 원하는 기관으로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의료기관 간 정보 연계로 중복검사 및 비용 부담 최소화

▶ 긴급 의료정보 공유체계 구축

- 응급 상황 시 별도 동의 없이 의료진이 필수 의료정보 즉시 확인

▶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 및 관리

- 건강관리 앱 등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도권 편입
- 국가 인증 및 보안 기준 강화로 안전한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

▶ 가명정보 활용 기반 마련

-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의료데이터 활용으로 AI 진단 및 신약 개발 촉진
- 민감정보 보호 및 심의 체계 구축으로 개인정보 안전 확보

실천 11

혈압·당뇨에 대한 개인맞춤형 스마트 책임관리를 실현하겠습니다.

▶ 우리 동네 혈압 책임관리제

- 지자체 중심의 지역·개인 단위 AI 활용 스마트 예방관리정책 수립
- 개인맞춤형 ICT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 관리 지원
- 소아청소년·중장년·장애인·취약계층 등 맞춤형 예방관리

▶ 스마트 당뇨 관리

-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활용 지역 단위 당뇨 합병증 예방프로그램 강화
- 당뇨관리기기 지원 확대 등 당뇨인 복지 프로그램 지원 확대
- AI 활용 혈당 위험군 맞춤 지원

07 |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농어촌 | 문화·관광 | 지역발전 | 교통 혁신



농어촌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 경자유전(耕者有田)에서 경영유전(經營有田)으로, 농민을 위한 농지로 변화시키겠습니다.
- 농민은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농산물 물류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 농어촌 일손 부족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우리동네 효도버스를 농어촌에 배치하겠습니다.
- 농어업을 대한민국 수출엔진으로 만들겠습니다.
- 농민을 힘들게 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

실천 01

경자유전(耕者有田)에서 경영유전(經營有田)으로 농민을 위한 농지로 변화시키겠습니다.

▶ 첨단화·규모화를 위한 농지이용 규제 완화

- 「헌법」 및 「농지법」 개정
- 식량안보 중심, 기술농업 특화, 식품산업 연계 등 기능별 전략 구역 지정
- 가짜 농업인, 투기용 농업경영체의 농지소유 단속 강화

▶ 농지은행 역할 강화

- 농지은행관리원을 농지경영원으로 전환
- 농지매입 규모 약 2배 확대
- 농업 특화 금융상품 및 농업 리츠(REITs) 도입
- 매입농지는 필지 통합 후 생산성이 높은 농업경영자에게 임차
- 고령농 농지 매각·임대 시 연금형 보상 제도 도입

실천 02

농민은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농산물 물류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 도매거래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

- 온라인 비중을 2035년까지 60%로 확대
- 기존 도매시장의 독과점구조 개선

▶ 안성농식품물류센터(유통·물류·허브 기능) 모델 확대

-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농식품물류센터 신설
- 집하, 저온저장, 포장, 배송, 계약재배 기반 수급관리(산지-마트 연결)

▶ 지자체 로컬푸드마켓 활성화

- 주요 관광지, 기차역, 터미널 등 로컬푸드마켓 운영
- 농민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농산물을 관광상품화

▶ AI, 농업위성, 드론 등을 통한 분석으로 정밀 수급 관리체계 고도화

실천 03

농어촌 일손 부족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공공부문 인력공급 2035년까지 70%로 확대

▶ 공공형 계절근로 인력 2배 공급

- 공공기숙사 10개소 → 100개소(폐교, 빈집 등 활용)

▶ AI 기반 인력 관제 시스템 도입

▶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임금체불 보험 가입 지원을 통한 안전망 구축

▶ 외국인선원제 근무요건 완화, 고용허가제 근무처추가, 계절근로제 품목확대

▶ 농어촌 노동 대체 인프라 시설, 기계, 로봇, AI 보급

- 전국 농기계임대사업소 통해 웨어러블 슈트, 첨단 농기계 저가 대여

실천 04

우리동네 효도버스를 농어촌에 배치하겠습니다.

▶ 모든 농어촌 지역에 왕진버스(양·한방, 구강검진, 검안 및 돋보기) 지원 확대

- 분기별 1회에서 격월로 방문 횟수 확대

▶ 찾아가는 편의점·공공밥상(밥차) 지원 강화

- 트럭 등 초기 비용 정부 지원, 오지 유류비 지원
- 식당·식료품점이 없는 벽지·오지에 조리시설을 갖춘 푸드트럭 정기 파견
- 지역 농협과 연계하여 로컬푸드를 식재료로 활용

실천 05

농어업을 대한민국 수출엔진으로 만들겠습니다.

▶ 규모화·첨단화 중심의 미래 수출형 농업 대전환

- 유기농·고품질·수출형 농업으로 대전환
- 공동영농 2035년까지 170개소로 확대
- 스마트농업지구 2035년까지 30개소로 확대
- 밭기계화율 2035년까지 80%로 상향

▶ 기업화·클러스터 기반의 미래 수산물 수출 중심 대전환

- 광어, 방어, 전복, 김, 미역 등 브랜드화를 위한 기업 진출 지원
- 양식 및 가공 클러스터 구축
- 수출바우처, 수산물 국제인증(ASC, MSC) 취득 비용 지원 등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실천 06

농민을 힘들게 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

▶ 원스톱 농정 통합 시스템 구축

- 직불금, 보조금, 방역, 환경 신고가 자동으로 연계되는 데이터 기반 시스템 마련
-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중복 제출 서류 50% 이상 감축
- 디지털 취약농가 전담창구 운영

▶ 현장점검 방식 전면 개편 및 규제 혁파

- 일정 면적 또는 두수 이하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면제
- 사후점검 중심의 위험기반 점검으로 전환
- 청년농, 귀농인, 스마트팜 목적의 농지 취득시 자격심사 간소화 및 신속 발급 트랙 도입으로 진입 장벽 완화

내삶이올라갈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문화·관광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 민간 주도 K-컬처 규제 샌드박스 특구 조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 시·군·구 단위 국민체육센터와 읍·면·동 단위 우리동네 체육관을 확충하겠습니다.
- 국가유산을 지역 거점 문화자원화하여 지역문화관광 시대를 열겠습니다.
- 15분 문화 생활권 조성으로 비수도권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 지역으로 확장하는 K-콘텐츠 시대를 열겠습니다.
- 초광역권 메가시티에 국립미술관·국립국악원과 K-POP 전용공연장을 건립하겠습니다.
- K-콘텐츠 기반 한류산업을 K-푸드·웰니스·관광 등 한류연관산업으로 확장하겠습니다.
- 낚시를 문화레저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실천 01

민간 주도 K-컬처 규제 샌드박스 특구 조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 **규제 혁파 및 이중 심사 폐지**

- 방송 광고 심의 통과 광고물에 대한 영등위 등급 분류 면제 추진
- 지역 문화·체육 인프라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을 2029년까지 3년 연장

▶ **K-컬처 규제 샌드박스 특구 비수도권 5개 권역 지정 및 실증 특례 부여**

- AI·XR 등 신기술 융합 콘텐츠에 선허용-후규제 원칙 적용
- 이동형 VR 체험 트럭, AI 홀로그램 공연장 등 건축·안전 규제 완화

▶ **지자체별 AI 기반 한류 전문 교육 아카데미 설치 및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

실천 02

시·군·구 단위 국민체육센터와 읍·면·동 단위 우리동네 체육관을 확충하겠습니다.

- **시·군·구 단위 국민체육센터 및 읍·면·동 단위 우리동네 체육관 지속적 확충**
  - 유휴 시설·부지 활용
  - 폭염·한파를 차단하는 스마트 에어돔 설치로 사계절 이용
- **공공체육시설에 생활체육지도자 확대 배치 및 호봉제 도입**
- **우리동네 생활체육 리그 상설화**
  -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 리그전을 연중 개최

실천 03

국가유산을 지역 거점 문화자원화하여 지역문화관광 시대를 열겠습니다.

- **시·도 및 시·군·구 단위 핵심 국가유산(문화·무형·자연유산) 대상 국가유산관 건립**
- **최대 국가유산 축제로 자리매김한 궁중문화축전 규모 확대 및 세계 주요도시 순회 개최**
- **지역별 대표 국가유산축제를 육성**
  - 민간·기업 등의 축제 후원제도 도입으로 축제 자생력 확보
- **국가유산도시 및 국가유산지구 지정·육성**
  - 문화·무형·자연유산 기반 지역문화인프라 확충 지원
- **외국인 장기체류형 한민족문화체험촌 및 K-명상마을, K-푸드전승관 조성**
- **AI 헤리티지(문화유산) 선도국 3년 프로젝트 추진**
  - 국가유산 지정·관리·활용정책을 국가 AI 선도사업으로 지정

실천 04

15분 문화 생활권 조성으로 비수도권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 도보 15분 이내 문화 생활권 전국 1만 곳 조성

- 유휴 공간 및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생활밀착형 공연·전시 거점으로 전환
- 민간 공급 복합문화센터 확충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 꿈의 예술단 및 국립예술단체 지역 순회 대폭 강화

- 아동·청소년 대상 오케스트라·극단 운영 지역을 90개 시·군·구로 확대

▶ 국립박물관 화제작(신라 금관전 등) 지역 순회 전시 14개관 이상 확대

실천 05

지역으로 확장하는 K-콘텐츠 시대를 열겠습니다.

▶ 중부·영남·호남권에 청년 정주형 만화·웹툰 창작 IP 허브 센터 설립

▶ AI로 대체되는 중견 게임개발자 지원을 위한 시니어 창업자 전용 게임펀드 조성 및 거점별 시니어 창업용 게임 인큐베이팅 센터 운영

▶ 창작자(작가·감독·출연자등)·제작사에 대한 뉴미디어(IPTV·OTT·방송포맷) 저작권 보호 강화로 콘텐츠 재상영 분배금 지급

▶ 지상파방송의 애니메이션 방영권료 현실화, 애니메이션 전문펀드 운용방식 개편

▶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조성 및 국제뮤지컬 페스티벌 개최

▶ 청년광고아카데미 개설 및 글로벌청년광고페스티벌 개최

▶ 대중문화예술 명예의전당 건립 및 지역대학을 K-대중음악공연 생산 거점화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실천 06

초광역권 메가시티에 국립미술관 국립국악원과 K-POP 전용공연장을 건립하겠습니다.

- **초광역권 메가시티에 국립미술관·국립국악원 지역 분관 및 K-POP 전용공연장 건립**
  - 국립미술관 분관을 영남권·호남권·강원권·경기북부권에 신규 건립
  - 국립국악원 분원을 충북·경북에 신규 건립
  - K-POP 전용공연장을 초광역권 단위로 건립
- **시·군·구 단위 문화기반시설인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프로그램 활성화**
  - 현대·전통 문화예술강좌 운영
  -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체육 시설 복합화 추진
- **글로벌 K-POP 페스티벌 개최**
- **광역·기초 지자체에 장애인 문화예술체육 전담조직 설립**

실천 07

K-콘텐츠 기반 한류산업을 K-푸드·웰니스·관광 등 한류연관산업으로 확장하겠습니다.

- **K-콘텐츠와 연계한 수출패키지 육성 및 콘텐츠 IP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및 한류산업 분야 스타트업 지원**
- **K-콘텐츠 사업자와 지역특화산업 매칭 및 상품화 지원**
- **문화, 체육, 레저, 취업과 연계한 한류산업박람회 개최**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실천 08

낚시를 문화레저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산하 낚시산업과 신설

- 낚시 복합타운 조성, 전용 낚시공원 확대
-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납추 사용 규제, 쓰레기 문제 등 환경 보호 체계화
- 낚시용품, 소프트웨어, 관광 상품 연계하여 산업화 지원

내삶이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지역발전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 기업을 부르고 청년을 남기는 지역경제 부활 파격 세제 패키지를 추진하겠습니다.
- 한국형 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을 확대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및 기업 지방 이전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완성하겠습니다.
-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지방관광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
- 권역별 KIST 분원 추진으로 R&D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 세계 TOP3 글로벌 항만허브를 구축하겠습니다.
- 군사 규제 완화로 해안의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 군 유휴지 및 미활용 군용지를 민·군 상생을 위한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 민통선 조정과 합리적 재설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방치된 빈집을 분산형 호텔로 바꿔, 지방의 관광·일자리를 함께 살리겠습니다.

실천 01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장기간 유지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물가상승 및 재정사업 규모 변화에 맞게 완화

- 예타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1,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 국가 재정지원 기준을 6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 기준을 1,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기준 정비

- 사회복지·보건·교육 등 분야별 예타 적용 기준 재설계

실천 02

기업을 부르고 청년을 남기는 지역경제 부활 파격 세제 패키지를 추진하겠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및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즉시 법인세 전면 면제

- 수도권 소재 기업이 본사 및 주요 생산시설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 일정기간 법인세 전액 면제 등 파격 조건으로 정착 지원

▶ 고용 유지 조건부 가업상속세 전액 면제

- 지역 향토기업 및 이전기업이 사업을 승계할 때, 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고용을 장기간 유지하는 조건

▶ 기업과 직원이 모두 만족하는 정주여건 조성 지원

- 세제 혜택으로 절감된 기업의 자금이 임직원들의 주거지원(사택 제공 등), 자녀 교육, 복지 인프라 확충에 재투자되도록 유도

실천 03

한국형 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을 확대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 2030년까지 한국형 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 100개소 지정

- 현행 16개소 수준의 공간혁신구역을 대폭 확대하여 전국 100개소 지정 추진
- 50개소 이상을 비수도권에 우선 배치하여 지역균형발전 실현

▶ 토지이용 규제 혁신 및 지자체 자율성 확대

- 용도지역 규제 완화, 업무·주거·산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고밀 복합개발 허용
- 용적률 및 건폐율을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 설정하도록 권한 확대

▶ 혁신 거점 중심 개발 대상지 발굴

- 철도 및 교통 거점 역세권, 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산업단지, 유휴 공공부지
- 해당 지역을 미래형 복합 혁신지구로 전환

▶ 개발 추진 절차 및 지원체계 개선

-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공공기여 협상 기준 명확화, 교통·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패키지 지원 체계 구축

▶ 전략적 고밀 복합개발 관리 장치 마련

-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관리 체계 구축
- 공공성과 도시계획 기준을 반영한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실천 04

공공기관 및 기업 지방 이전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완성하겠습니다.

▶ 2차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 지방 이전 추진과 정주여건 정비

- 시장형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등 2차 공공기관 등에 대한 이전 추진
- 지방 이전기관·기업에 대한 차등 법인세, 지방세 감면, 부지지원 등 지원책 도입
- 이전 직원 등에 대한 이주 정착장려금, 근로소득 공제, 주택 제공 등 파격적 인센티브 도입

실천 05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지방관광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

▶ 지방공항 국제선 직항노선 확충 및 인천공항-지방공항 환승편 확대

- 김해, 제주, 김포, 대구, 청주 국제공항 대상
- 인바운드 슬롯 확대, 인바운드 항공사 인센티브 제공, 공항시설 이용료 감면

▶ 지방공항 편의서비스 확충

- 지방공항청사 내 면세점 확충, K-컬처 체험공간 설치, 교통 등 편의서비스 제공

▶ 지방공항-지역관광지 연계 교통(플랫폼 택시, 버스, 철도) 인프라 확충

▶ 지방공항 연계 지방관광상품 개발·운영

- 관광업계에 지역관광 상품개발비 및 마케팅 지원

▶ K-관광숙박시설 인증 브랜드(예: 프랑스 지트) 및 K-식당 인증 브랜드 개발 및 등급화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실천 06

권역별 KIST 분원 추진으로 R&D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KIST 분원 최소 1개소 이상 신규 설치

- 핵심 지역전략 사업과 연계한 KIST 분원 설치로 각 지역 인프라 및 특성에 부합하는 전략산업 집중 발굴 및 고도화

▶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기술사업화 전담 지점 최소 1개소 이상 추가 설립

- 지역별 전략사업과 매칭된 KIST 이노베이션 지역 거점 구축
- 지역 내 신규 고용 창출 및 실물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실천 07

세계 TOP3 글로벌 항만허브를 구축하겠습니다.

▶ 부산항을 글로벌 컨테이너 메가 허브로 구축

▶ 울산항을 에너지 석유화학 글로벌 허브로 구축

▶ 영일만항을 철강·벌크·이차전지, 환동해 크루즈·관광 특화

▶ 마산·진해항을 제조 및 수리조선 특화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실천 08

군사 규제 완화로 해안의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 해안 경계 임무의 단계적 이관 및 과학화

- 육군이 담당하던 해안 감시 및 경계 업무를 해양경찰청에 점진적으로 이관하여 군의 전투 병력 부족 문제 해소
- 드론, AI 감시 센서 등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해상-해안 통합 치안 시스템 구축으로 경계 효율성 극대화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철책 철거

- 경계 업무의 과학화와 이관에 따라 불필요해진 해안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면 재검토 및 해제
- 해안가에 설치된 노후 철책을 철거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 및 자유로운 해안 접근성 확보

▶ 규제 해제 부지의 공공적 활용 및 지역 랜드마크화

- 규제가 해제된 해안 부지를 친환경 수변공원, 관광 레저 단지 등 주민 공유 공간으로 조성
- 지역 특색을 살린 랜드마크 개발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

실천 09

군 유휴지 및 미활용 군용지를 민·군 상생을 위한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 산재한 군사시설, 유휴지 등을 지역 단위로 통·폐합해 지자체의 복합경제거점으로 하는 민·군복합타운 조성

▶ 장병 주거·복지시설 개선해 훈련·임무 수행 여건 보장

▶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군 공항·군부대 등 이전 추진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실천 10

민통선 조정과 합리적 재설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지형 특성 및 작전환경을 반영하여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민통선 지정 범위 축소

- 군사분계선 이남 10㎞ → 5㎞ 조정

▶ 군사분계선(MDL) 차단 강화(장벽·지뢰·장애물 설치 등) 등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한 민통선 운용기준 재설계

▶ 민통선 조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재수립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접경지역 활용 추진

실천 11

방치된 빈집을 분산형 호텔로 바꿔 지방의 관광·일자리를 함께 살리겠습니다.

▶ 빈집 관광 전환(분산형 호텔) 시범지구 조성

- 부산 및 지방 구도심 빈집을 활용한 분산형 숙박 모델 구축
- 마을 단위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 및 공간-민간협력(PPP) 기반 단계적 확대
- 인허가 원스톱 처리 및 건축용도 특례 적용
- 빈집 관광숙소 인증제 도입

▶ 빈집 확보 및 리모델링 지원

- 공공 매입·장기임대·기부채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
- 소유자 참여 및 수익공유 구조 도입
- 노후 빈집을 숙박·체험형 공간으로 리모델링

▶ 관광 인프라 및 운영 기반 구축

- 마을 내 거점시설(프런트·숙박·식음시설)을 중심으로 분산 배치하여 마을 전체가 하나의 호텔로 기능하는 분산형 숙박 모델로 설계
- 골목길 정비·조명·방범 등 환경 개선
- 로컬 상권·체험 프로그램 연계

살기 좋은 우리 동네

교통 혁신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 어르신 대상 전국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나도 역세권! 광역 급행 교통망으로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완성하겠습니다.
- K-패스 환급 확대로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지역이 살아나는 교통을 만들겠습니다.
- 청년에게 대중교통 바우처를 지급하겠습니다.
- UD택시 확대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실천 01

어르신 대상 전국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만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완전 무료**

▶ **스마트 피크타임 패스 도입**

- 평일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 대에는 정상요금, 그 외 시간에는 무료

▶ **국고 지원으로 지자체 부담 일부 보전**

실천 02

나도 역세권! 광역 급행 교통망으로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완성하겠습니다.

▶ GTX-A·B·C노선의 경기, 강원, 충청지역 연장안 조속 추진 지원 및 추가 노선 신설안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등 적극 추진

▶ 지방권 광역급행 철도 확대
-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 고속철도 등 남부권 고속철도 신설안 조속 추진
- 대구경북신공항철도를 GTX급 광역급행철도로 추진
- 남부내륙철도(김천~진주~거제 구간)와 중부내륙철도(문경~김천 구간)의 고속철도망 확충 계획을 조속히 추진하여 수도권과 전국 내륙지역 주요 도시 연결
- 충청권 CTX(대전~세종~청주공항) 조속 추진
- 부울경, 충청권, 호남권 등 지방 광역권 급행철도 신규노선 발굴

▶ 3기 지하철(10, 11, 12호선) 신규 노선 재조정 및 추진
-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중단된 3기 지하철 계획을 재개발·재건축 예정지구를 포함한 신규 노선으로 재조정하여 지하철 비수혜지역에 대한 차별 해소

▶ 제1기·제2기·제3기 신도시간 연계교통망 구축
- 제1순환고속도로와 제2순환고속도로 사이에 (가칭)중순환고속도로 건설에 착수
- 서울에서 사방으로 구축된 9개 방사축 도로망과 네트워크화
  * 의왕~시흥~인천~김포~고양~의정부~남양주~하남~광주~성남~의왕 등

▶ 초광역 급행 교통망 조기 완공
- 5대 거점 도시와 인근 강소도시를 30분 생활권으로 연결
- 광역 급행 교통망(GTX급) 조기 완공으로 지역 내 일자리와 주거 간 거리 단축

실천 03

K-패스 환급 확대로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청년(19~34세) 대상 K-패스 환급률을 50%로 상향

▶ 전국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수단 간 연결성 강화, 광역 환승 시스템 연계로 거주지에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 제공(또는 이동거리가 멀수록 혜택이 커지게 설계)
- 지자체별로 파편화된 교통비 지원(예:부산 동백패스 등)을 K-패스 플랫폼으로 통합

▶ 저소득 청년 및 다자녀가구 환급률의 파격적 확대
-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계층 청년에게는 최대 83%, 2자녀 이상 50%,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는 최대 75% 교통비 환급

실천 04

지역이 살아나는 교통을 만들겠습니다.

▶ 농어촌 우버 도입을 통한 교통 공백 이동권 보장

-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어촌 및 고령 심화 지역 중심 운영
- 플랫폼 데이터(호출 대비 미배차율)를 활용하여 교통 취약지역 선정
- 고령자·임산부·장애인 등 교통약자 우선 이용 체계 구축

▶ 지역 청년 중심 모빌리티 운영 모델 구축

- 청년 스타트업 등 참여를 통한 민간 중심 경쟁 구조 도입
- 지역 주민 자가용 활용 기반 드라이버 참여 허용
- 운전자 면허·무사고·교육 이수 및 보험 가입 의무화

▶ 안전관리 및 요금 관리 체계 마련

- 안전 기준·책임 규정 중심의 최소 규율, 최대 자율 원칙 적용
- 요금 자율화 원칙하에 상한제 도입 및 교통약자 바우처 연계

▶ 농어촌 수요응답형 버스 및 100원 택시 대폭 확대

-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전국 농어촌에 전면 도입
- 장날 등 전통시장 및 지역 마트를 직통으로 오가는 장보기 전용 노선 신설

실천 05

청년에게 대중교통 바우처를 지급하겠습니다.

▶ 만 19~26세 대한민국 청년 대상, 연 15만 원 수준의 청년대중교통바우처 지급

▶ 경제활동 이전 과도기에 놓인 청년의 부대비용에 대한 부담 해소와 이동권 증진

실천 06

UD택시 확대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UD택시 시범사업 전국 확대**

  ※ UD택시: Universal Design 택시의 줄임말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택시

- **UD택시 보급 위한 차량 구매보조금 및 운영지원금 지원**

- **택시업체 대상 일정비율 이상 UD택시 도입 의무화**

- **택시업체에 휠체어 탑승 설비 보조금 지원**

내삶이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08 | 안전한 울타리

국민 안전안심 | 아동·청소년 보호 | 우리국민 보호



국민 안전안심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 조직사기범죄로 빼앗긴 내 재산, 가장 먼저 돌려드립니다.
- 나이 뒤에 숨은 범죄, 더 이상 예외는 없습니다.
-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1조 규모 사이버재해보험 제도화로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해 신속히 보상하겠습니다.
- 선결제 피해를 막겠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관리 사각지대 해소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 성별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보호체계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 112 AI 드론 우선 출동으로 치안 골든타임을 만들겠습니다.
- 혼자라도 든든하게, 24시간 지켜주는 AI 안심 돌봄 센터 구축하겠습니다.

실천 01

조직사기범죄로 빼앗긴 내 재산 가장 먼저 돌려드립니다.

▶ 사기 범죄수익 100% 환수 및 피해자 최우선 환급제 신설

- 조직사기 범죄수익 전액 몰수 의무화
- 국가가 환수한 사기범의 재산은 국세 및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피해자에게 비례 환부하도록 명시, 서민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

▶ 조직사기 범죄 무관용 강력 처벌

- 편취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의 수괴 법정형 대폭 상향

▶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 피해자의 손실 복구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돕는 조직사기 피해자 지원법인을 법무부에 등록하게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근거 마련

▶ 수사기관의 신분위장수사 및 범인추적과 은닉재산 파악을 위한 통신제한조치 도입

▶ 사법협상(플리바게닝) 및 궐석재판 도입으로 범죄 조직 해체

실천 02

나이 뒤에 숨은 범죄
더 이상 예외는 없습니다.

▶ 일반 촉법소년 연령 하향

-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1년 하향 조정

▶ 강력범죄 핀포인트 하향

- 살인, 강간, 강도, 방화 등 고위험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촉법소년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 대폭 하향

▶ 교정 시스템 고도화

-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소년원 내 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재범률을 낮추는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을 병행 도입

실천 03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폭력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도록 법체계 정비

- 사회 문제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교제 폭력을 법체계 내에 명확히 규율
- 반의사불벌죄 배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권한 확대
- 가해자의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강화

안전한 올터리

실천 04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위한 안정적인 예산 반영

- 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이의신청 지원금 현실화
- 지원 건수 확대

실천 05

1조 규모 사이버재해보험 제도화로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해 신속히 보상하겠습니다.

▶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피해기업 및 이용자 대상 신속 보상 체계 마련

▶ 사이버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및 중소기업 지원으로 제도 실효성 확보

- 일정 규모 이상 기업 대상 보험 가입 의무화
- 중소기업 보험료 최대 70% 지원으로 부담 완화

▶ 전문 손해평가 체계 도입으로 보상 공정성 강화

- 침해사고 피해 규모 산정을 위한 전문 평가 시스템 구축

▶ 사이버 복원력 강화 및 피해 확산 방지

- 기업의 사전 대응 유인을 높여 보안 투자 확대 및 재해 대응 역량 강화

안전한 올터리

실천 06

선결제 피해를 막겠습니다.

- **공연이나 스포츠 예매, 운동시설 등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민생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불공정약관 제도 개선 및 중요사항 표시 의무 부과**

- **AI를 활용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처벌 강화**

- **상조시장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도입**
  - 상조업체 책임경영과 부실화 방지, 선수금 관리 안전장치 도입 등

실천 07

성범죄자 신상관리 사각지대 해소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관리 관련 법안 개정 추진으로 입법 사각지대 해소**
  - 경찰의 대면 점검 권한 명시 및 거부·위반 시 처벌 강화
  - 부처 합동 성범죄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등록·점검·공개 업무 연계
  - 등록정보신고 및 방식 변경(등기송달 → 전자신고)
  - 신고 기한 단축
  - 등록대상자 식별 정보 구체화 (사진 외 문신, 흉터 등 신체특징 공개 정보 추가 명시)

안전한 올터리

실천 08

성별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보호체계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 여성 피해자 지원 기능을 성별과 무관한 모든 피해자 지원으로 명칭 변경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 여성긴급전화 1366 → 폭력긴급전화 1366 등 명칭 변경
- 성별과 관계 없이 모든 피해자를 포괄할 수 있는 상담 인력 양성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실천 09

112 AI 드론 우선 출동으로 치안 골든타임을 만들겠습니다.

▶ 112 신고 시스템-드론 관제 연동

- 관내 주요 거점에 자동 이착륙 및 충전 스테이션을 구축, 폭력·강도 등 강력사건 신고 접수 시 GPS 기반으로 AI 드론이 즉각 자동 출동
- 지휘부에 실시간 영상 전송, AI 활용한 용의자 추적 등으로 대응 전략 지원

안전한 올터리

실천 10

혼자라도 든든하게, 24시간 지켜주는 AI 안심 돌봄 센터 구축하겠습니다.

▶ AI 안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스마트폰 사용이력, 전력 및 수도 사용량 등 일상데이터 실시간 분석
- 이상 징후 감지 후 즉각 경보 알림 통합시스템 구축

▶ 24시간 핫라인 구조체계 운영

- 이상 징후가 발생하여 경보 작동 시 AI가 안부전화를 걸어 상태 확인
- 무응답 또는 위험이 감지되면 구급대 및 지자체 전담요원에 전달 → 구조 출동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AI 안심돌봄센터 설치

▶ 은둔형 가구를 위한 맞춤형 사회복귀프로그램 지원

- 발굴된 고립·은둔형 가구 대상 심리상담, 대인관계 회복 훈련, 직업교육 등 단계별 맞춤 지원

내삶이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아동·청소년 보호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 아이들을 위한 중독 없는 SNS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범죄를 엄벌하겠습니다.
-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부합하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본인부담금 없는 디딤씨앗통장으로 모든 아이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만들겠습니다.
- 내 아이의 건강한 오늘과 내일, 국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실천 01

아이들을 위한 중독 없는 SNS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미성년자 SNS 가입 보호장치 강화

- 16세 미만 청소년 SNS 가입 시 보호자 동의 의무화 추진
- 유해 콘텐츠 및 무분별한 서비스 이용 방지
- SNS 규제 관련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추진

▶ 중독형 알고리즘 제한 및 시간순 노출 도입

- 미성년자 계정에 대해 알고리즘 추천 제한 추진
- 시간순 콘텐츠 노출 방식을 통한 과도한 몰입 방지
- 특정 시간대 알림 제한을 통한 건강한 디지털 이용 습관 형성 지원
- 확증편향 및 자극적 콘텐츠 반복 추천 구조 완화

▶ 청소년 디지털 안전 및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SNS 범죄 예방 및 위험성 교육 확대
- 미디어 리터러시 및 디지털 역량교육 강화

▶ 플랫폼 책임 강화 및 이용자 보호체계 구축

- 플랫폼의 미성년자 보호 기준 및 책임 제도화
- 청소년 건강·미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경고 문구 표시 추진
- 아동·청소년 중심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실천 02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형량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연장**

-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이나 살인 등 악질적인 성범죄는 이미 공개 기간이 끝났더라도 다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

실천 03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범죄를 엄벌하겠습니다.

-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
  - 아동·청소년 유괴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의무화

- **신상공개 강화**
  - 아동·청소년 약취·유인 범죄자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
  - 기수범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공개 대상에 명시

- **법정형 상향**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법정형 상향
  - 미수범 무감경 원칙 적용

안전한 울타리

실천 04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부합하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입양절차 전면 개편

- 기본교육을 입양신청 전 사전 이수 방식으로 전환
- 범죄경력조회·가정환경조사 등 기존 절차를 신청과 동시에 병행
- 법원허가 신청을 3개월 이내로 단축 추진
-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법원 연계통한 아동 최우선 입양제도 마련

▶ 심사는 상시로, 결연(임시양육)은 신속하게, 가정법원 허가는 실질적 심사로 심의체계 개편

- 입양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 확대하여 자격 및 결연심사 상시 운영
- 결격사유 없으면 신속한 결연 및 임시양육 결정, 정부는 양육 및 입양 허가지원으로 역할 재정립

▶ 입양전담 인력 확충

- 아동권리보장원 입양 전담인력 확대
- 기존 민간입양기관 전문인력과 협업체계 구축

실천 05

본인부담금 없는 디딤씨앗통장으로 모든 아이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만들겠습니다.

▶ 아동의 저축을 전제로 한 매칭 지원 방식 폐지

▶ 납입 부담 해소를 통한 가입률 제고로 취약계층 아동 전원의 자산형성 보장

안전한 올터리

실천 06

내 아이의 건강한 오늘과 내일 국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 **초등학교 신입생 대상 안경구매지원금 지원**
- **초고도비만 초·중·고등학생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실천 07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온·오프라인 정보연계를 활용하여 위기 청소년 파악**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상담·멘토 프로그램 확대 및 교육 강화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자립지원 대상 확대 및 정책 홍보 보완 등 제도 개선 추진**
  - 기존의 상담·보호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의료·심리치료 및 학업 지원까지 확대
  - 자립지원 대상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 뿐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통해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

안전한 올타리

우리국민 보호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 해외발 여론조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정착 올인원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실천 01

해외발 여론조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 온라인 게시자 접속국가 표시 의무화로 이용자의 정보 신뢰성 강화

- 주요 플랫폼에서 게시자의 접속국가를 표시하여 정보 신뢰 판단 기반 제공
- VPN 등 우회접속 여부를 함께 제공하여 허위계정 및 위장활동 식별 강화

▶ 플랫폼 사업자 접속정보 제공 의무화 및 기술 도입 지원

-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접속국가 정보 제공 의무 부여
- 기술 도입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으로 제도 이행 기반 확보

▶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면책 기준 마련

-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 경우 탐지 오류 등에 대한 책임 면제

실천 02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 외국인 선거권 상호주의 도입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지방선거권 미부여

▶ 외국인 선거권 부여 조건 강화

-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 지속해서 거주한 기간 강화

실천 03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정착 올인원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지역 전략산업 연계 일자리 매칭

- 남북하나재단의 일반 취업 지원을 넘어, 지역별 특화산업과 탈북민의 능력을 정밀하게 분석해 일자리를 연결
- 직무 재교육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탈북민이 해당 산업의 전문 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 경로 설계 제공
- 지역 중소기업이 탈북민을 고용하면 지자체가 추가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기업들이 더 많이 채용하도록 유도

▶ 고립 방지를 위한 생활 밀착형 돌봄 시스템 구축

- 신변보호관(경찰) 중심의 감시형 관리를 넘어, 지자체 복지 공무원과 지역 주민(멘토)이 결합된 생활 밀착형 돌봄 시스템을 구축

▶ 지역 안착 인센티브 미래행복펀드 지역 플러스 도입

- 정부의 미래행복펀드와 별개로, 한 지역에서 5년 이상 장기 거주하며 성실히 근로하는 탈북민에게 지자체가 추가 장려금 매칭

09 | 흔들림 없는 외교·안보

외교 | 스마트국방 | 장병복지 | 국가헌신 예우



외교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 중국 서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습니다.
- 트럼프 2기 대응 종합전략으로 한미동맹 플러스를 제시하겠습니다.
- 지역 맞춤형 대중국 전략으로 안보는 단단히 경제는 다변화 시키겠습니다.
- 미래지향 한일협력 2.0지방정부 중심 생활밀착 외교로 나아가겠습니다.
- 로컬의 글로벌화! 지역 전략산업 글로벌 세일즈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 750만 재외동포 네트워크 활용하여 지역투자 시대를 열겠습니다.

실천 01

중국 서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습니다.

▶ **불법 구조물 비례대응 설치 및 철거요구**

- 동일 수역에 해양 관측 및 연구용 구조물 설치
-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철거 압박

▶ **불법 조업 벌금 대폭 상향**

- 불법 조업 벌금을 최대 15억 원으로 5배 상향
- 정선명령 불응 벌금 3억 원으로 3배 상향

▶ **중국 어선 전용 단속함 건조 예산 매년 1,000억 원(3천톤급 1척) 배정**

▶ **해경 비살상 진압 무기 개발 및 지급**

▶ **저궤도 그물망 위성(2035년까지 15기 도입) 및 드론 활용한 해양 스마트 감시망 구축**

실천 02

트럼프 2기 대응 종합전략으로 한미동맹 플러스를 제시하겠습니다.

▶ 한미동맹 플러스 로드맵 수립

- 안보(주한미군, 확장억제 등), 경제(반도체, 배터리, AI 등), 기술동맹(조선, 우주, 사이버)까지 패키지화한 10년 로드맵 국회 보고 의무화

▶ K-방산·원전 글로벌 전초기지 조성

- 경남(창원), 경북(구미) 등 기존 방산 거점을 한미 방산 협력 특화단지로 지정
-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유치, 미군 장비 현대화 사업 등과 관련, 지역 중소기업 참여 지원 센터 설립 등

▶ 수출 중심 지역 관세 쇼크, 지역이 직접 막는다

- 광역시도별 미국 통상 대응 전담 TF 설치(시도지사 직속)
- 지역 수출기업 대상 트럼프 관세 피해 긴급 경영안정 자금 조성(국비 매칭)
- 지자체-KOTRA-미국 상공회의소 3각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동맹 내 지방정부 역할 확대

- 방산, 에너지, 첨단 제조 투자 유치를 위한 한미 지방외교 플랫폼 구축
- 지자체와 美 주정부 간 MOU·교류 예산 지원

실천 03

지역 맞춤형 대중국 전략으로 안보는 단단히 경제는 다변화 시키겠습니다.

▶ 지역의 대중국 리스크 분산 지원

- 시·도지사 직속 공급망 다변화 지원센터 설립 및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현지 거점 사무소 확대
- 중국 내 제조 시설을 동남아나 인도로 이전하거나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지역 기업에 리쇼어링에 준하는 보조금 및 관세 상담 지원
-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 농수산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베트남, 인도, UAE 등 신흥시장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 운영 및 해외 물류 비용 일부 지원

▶ 서해안 기후·환경 상설 협의체 설립·가동

- 경기·인천·충청·전라 등 서해안 지자체 연합, 서해안 공동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 제안 및 미세먼지 데이터 공유 체계 구축을 통한 중국 측의 책임 있는 조치 요구 등

▶ 한중 실버 경제 특구 조성 및 교류

- 고난도 의료 기술이나 요양 서비스가 우수한 지자체를 한중 실버 산업 협력 지구로 육성, 의료·실버 산업 수출 산업화
- 중국의 고부가가치 실버 소비층을 겨냥한 의료 관광-요양 결합 상품 개발 및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예: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등) 판로 개척 지원 등

▶ 지역 문화 자산 수호 및 K-컬처 방어 체계 구축

- 지역 문화 주권 수호 위원회 설치 및 글로벌 상표권·저작권 등록 지원
- 지역 축제(단오제, 김치축제 등)와 특산품에 대한 국제적 연고권 강화 사업 확대

실천 04

미래지향 한일협력 2.0 지방정부 중심 생활밀착 외교로 나아가겠습니다.

▶ 한일 지방공동체 펀드 조성

- 지자체 간 청년 교류, 스타트업·관광·콘텐츠 공동 프로젝트에 매칭 펀드 지원

▶ 부산-후쿠오카, 제주-오키나와 등 생활권 인접 도시간 1시간 생활권 경제벨트 시범사업 추진 (관광·의료·MICE 패키지)

- 통합패스 출시, 교통·박물관·의료기관 등 할인 혜택
- 현재 비정기적인 직항노선 정기화로 1시간 이동권 보장
- LCC대상 취항 장려금 및 공항이용료 감면 인센티브

▶ 독도·역사 문제는 중앙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지방은 실질협력 (청년 일자리, 관광, 문화교류 등)에 집중하도록 역할 분담 명확화

실천 05

로컬의 글로벌화! 지역 전략산업 글로벌 세일즈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 지자체-외교부 지방외교 통합 지원 데스크 설치

- 재외공관 지역기업 전담관 지정
- 광역 지자체 국제관계대사 역할 강화 등을 통한 지역 특화 상품의 해외 판로 개척 등 밀착 지원
- 외교부 내 지방외교 전담 인력 확충, 예산 확보 등

▶ 자매결연 도시와의 경제 협력 쿼터제 도입

- 지자체가 해외 자매·우호 도시와 교류 시, 단순 방문이나 문화행사가 아닌 지역 특화 산업 수출액 또는 기업 매칭 건수를 핵심 성과 지표로 설정

▶ 방산·원전·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에 지역 기업 참여 확대

▶ 지자체-코트라-상공회의소 공동 해외시장 개척단 상설화 등

흔들림 없는 외교·안보

실천 06

750만 재외동포 네트워크 활용하여 지역투자 시대를 열겠습니다.

▶ 글로벌 고향사랑 기부제 및 동포 투자 유치

- 재외동포들이 고향의 전략 산업이나 관광 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전용 투자 펀드 조성 및 세제 혜택 부여

▶ 우리 지역을 다른 나라에서 대표하는 글로벌 명예대표 위촉

- 기존의 홍보대사와 차별화 하여 단순한 지명도가 아닌, 해당 지역의 전략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재외동포 전문가 선별
- 지역 특산품 해외 판로개척 협력 체계 구축
- 해외 거주 동포 2·3세 인재들과 고향의 대학·스타트업을 연결하는 글로벌 멘토링 및 인턴십 프로그램 주도 등

▶ 올해의 우리고향 재외동포상 제정

- 경제·학술·문화·공공봉사 분야별 수상자 선정
- 수상자 초청 지역 강연·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앰버서더 위촉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등

▶ 뿌리찾기 프로젝트를 통한 동포사회-지자체 교류 활성화 등

내삶이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스마트국방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 K-방산 스타트업 혁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구축해 첨단과학기술군을 실현하겠습니다.
- AI 국방혁신 시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 국방 첨단 기술 R&D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실천 01

K-방산 스타트업 혁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 방산 벤처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K-방산 스타트업 혁신도시 지정

- 지역경제 침체 속에서 방산·AI 등 첨단기술을 도입·결합한 새로운 성장모델 수립

▶ 방위사업청,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와 협력해 방산 스타트업 육성

▶ 규제 완화 및 실증 지원, 군·대학·기업 공동 연구단지 조성

▶ 지역 내 국방기술 연구 및 인력 양성

- 미래전 대비한 국방역량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 수립

▶ AI·드론·로봇·무인장비 등 첨단 실험 장비를 실제 시험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실천 02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구축해 첨단과학기술군을 실현하겠습니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단계적 구축

- AI 기술 기반 체계 조기구축
- 유·무인 복합경계체계(GOP·해안·기지) 도입 가속화
- 전투 장병의 생존성 및 편의성이 보강된 개인 전투체계 개발

무기체계 획득절차 혁신

- 방위사업 체계의 과감한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 첨단 기술 무기체계의 적시 전력화 달성

국방 네트워크 및 사이버·전자전 방호 역량 획기적 강화

- 미래전의 핵심기반인 국방 정보통신망의 첨단화
- 사이버·전자전 공격에 대한 압도적 방어 능력 확보
- 우주 기반의 군사력 건설 연구개발 사업 확대

AI 첨단 과학 기술군 육성을 위한 민군협력 생태계 구축

- 국방과학기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국방과학기술 총괄 기구 설립
- 핵심 기술 중소기업 선정 및 육성, 부품 국산화 및 체계적 관리 등 추진

실천 03

AI 국방혁신 시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국방 AI 테스트베드 및 실증단지 구축

- 국방 AI·무인체계·드론·로봇 기술 실증을 위한 국방혁신 특화지구 지정
- 군·기업·연구기관 공동 활용 테스트 환경 구축

민·군 융합형 방산 혁신 생태계 조성

-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AI 기술 개발 참여 확대
- 국방 R&D와 민간 AI 산업 연계를 통한 기술 이전 및 상용화 지원

청년 중심 국방 AI 인재 양성

- 지역 대학과 연계한 국방 AI 특화 교육과정 신설
-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단계적 전국 확산 모델 구축

- 시범도시 2~3개 선정 후 성과 평가를 통해 전국 확대 추진
- 지역 균형발전과 국방혁신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 모델 정립

흔들림 없는 외교·안보

실천 04

국방 첨단 기술 R&D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10대 국방첨단기술 선정 및 국방 R&D 예산 확대

- AI, 양자, 레이저, 로봇, 무인기, 스텔스, 사이버, 사이버 전자전, 우주, 첨단소재

▶ 국방첨단기술 공유 및 협력을 지향하는 AUKUS(미·영·호주 다자안보협의체)의 7개 기술(양자, AI, 사이버, 전자전, 극초음속, 해저, 우주) 공동개발에 참여

▶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최신무기 확보를 위해 무기체계 획득기간 단축

- 신속소요획득 활성화, S/W 획득 시스템 구축
- 민간 기술 신속 도입을 위한 생태계 구축

내삶이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장병복지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 군 복무를 미래 준비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 군 가산점제를 남녀불문 도입하겠습니다.
- 장병의 처우개선으로 강한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 예비군 훈련참가자 처우개선과 군 구조 개편으로 상비병력 부족 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 장병들이 안심하고 군 임무를 수행하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실천 01

군 복무를 미래 준비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

- 국가를 위해 복무한 청년들의 시간이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군 경력이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 군 직무 경력 기반한 경력 전환 프로그램 도입, 민간 자격증과 연결된 군내 교육기회 제공 등
- 군 복무 중 군에서 수행한 직무(통신, 정비, 차량 등)에 대한 직무증명서를 발급하고 민간기업에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인증제도 도입
- 군 복무 경력 인증제도 도입 기업에 세제 혜택, 고용장려금 지원 등 혜택 제공

군 복무 기간중 전문 분야 교육 강화

- 드론, 로봇, AI, 전자정보 관련 기술 습득 기회 확대
- 실습 중심 교육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 운영

복무 중 학점 인정 및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확대

- 복무 기간 중 취득 가능한 학점 제도 운용
- 군 복무와 연계된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지원 강화

군 창업 프로그램 강화

- 군 복무 중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정례화
- 전역 후 창업 연계 지원 프로그램 마련

실천 02

군 가산점제를 남녀불문 도입하겠습니다.

▶ 공무원·공기업 등 채용시 군 가산점제도 시행

▶ 여성 전문병 제도 추진

- 여성에게도 전문분야 군 인력 진출 기회를 부여하는 여성 희망복무제 (여성 전문군인제) 도입해,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부족에 대비
- 전투부터 AI 첨단기술 및 행정분야까지 폭넓은 진출 보장

실천 03

장병의 처우개선으로 강한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 장병 복무 환경 개선

- 병영생활관 개선 및 위생시설 개선
- 군 간부들의 자가보유율 확대 및 간부독신자 숙소를 1인 가구형 중심으로 전면 확대 및 시설 개선
- 급식단가 지속적 인상 및 위탁급식 확대 등으로 군 장병 급식 품질 개선
- 군 복무 중 발생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제

▶ 초급간부 처우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개선

- 당직근무비, 훈련급식비, 주거환경개선비, 이사화물비 등 항목별 예산 증액
- 군 복무에 따른 각종 수당 현실화
- 소령~중령급 중견간부 처우 개선 병행 추진
- 군 간부 급여구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개선
- 부사관 제도 개선을 통한 부사관의 장교진출기회 확대
- 군 간부 정년 제도 개선 검토
- 「군인복지기본법」을 군무원까지 포함하는 「국군복지기본법」 제정

▶ 법무관을 증원하여 병사와 초급장교에 대한 법률지원 확대

흔들림 없는 외교·안보

실천 04

예비군 훈련참가자 처우개선과 군 구조 개편으로 상비병력 부족 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 예비전력 운용 합리적 개선

- 예비군 훈련 기간 단축, 동원훈련장 시설 현대화, 지역예비군·동원예비군 훈련 보상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

▶ GOP 경계전담부대 신설·운용

- 상비사단의 교육훈련과 작전 여건 보장
- 드론과 연계한 능동형 감시·정찰(ISR) 자산, 무인 정찰 로봇과 비살상 타격 수단, 스마트 장벽과 소수의 관리병력으로 GOP 경계작전 수행

▶ 상비병력 정예화

- 과학기술을 적용한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 해안 경계 책임 이관 검토

-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부대는 신속기동부대로 개편
- 전·평시 주요시설 경계, 대테러작전, 교육훈련 등에 전념

▶ 민간군사기업(PMC) 제도 도입

- 외곽경비, MRO, 급양 및 수송, 예비군 훈련 지원 등 군의 비전투 분야를 민간에 위탁하고, 군은 핵심 전투력 유지에 집중
- 법적·제도적 임명 및 평가체계 구비로 민간군사기업의 성실한 국방 임무 수행 유도

실천 05

장병들이 안심하고 군 임무를 수행하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 군 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사고 관리체계 구축

- 군 특성에 맞는 위험물 등에 대한 전문가 육성
- 안전 관련 사고 예방 및 대처에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

▶ 군 의료체계 혁신

- 국군 의무사 예하 국군의무후송항공대 확대
- 원격 비대면 진료 확대
- 군 병원 민간 의료인력 채용 확대
-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제
-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기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군의관 군사교육 소집기간(30일)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병역법 개정

▶ 전문의 단기 군의관이 장기복무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 강화

▶ 군 의료 고도화를 위한 민간 의료와의 연계 추진

국가헌신 예우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 최상의 보훈으로 호국영웅의 헌신에 끝까지 보답하겠습니다.

■ 소방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실천 01

최상의 보훈으로 호국영웅의 헌신에 끝까지 보답하겠습니다.

▶ **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맞춤형 소득보장체계 구현**

- 참전명예수당 등 2배 인상
-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2배 인상
- 가이드라인 마련 등 지역별로 상이한 참전명예수당의 형평성 제고 방안 추진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단계적 인상 및 기간, 대상자 확대**

▶ **보훈위탁병원 제도개선으로 유공자 의료 접근성 강화**

- 보훈 위탁병원 지정을 전체 1차 의료기관(의원급)으로 확대하고 한의원도 포함

▶ **지역별 대상자를 고려한 국립묘지 확충 추진**

실천 02

소방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 ‘군·경’ 용어를 쓰는 현행 9개 법률에 대해 ‘군·경·소방’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소방공무원 위상 정립

내삶이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내 삶이 올라갈 시간

우리의 일상! 확실한 변화!

국민의힘

이 정책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138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